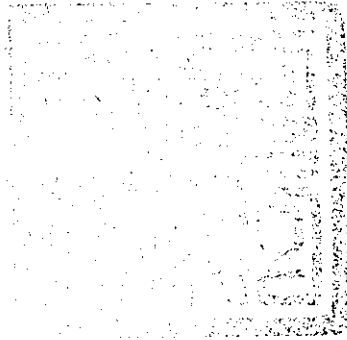


민주 통일 의 길



국 토 통 일 원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굴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든든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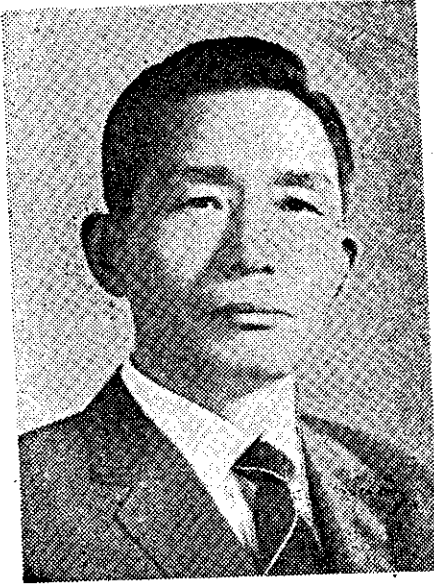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응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 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박정희 대통령 경축사



—제25주년 광복절—

친애하는 국내외 5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비할데 없는 감
격과 환희속에 맞이했던 조국광복, 그
날로부터 꼭 4반세기가 되는 날입니다.
25년전 전국 방방 곡곡의 거리거리에
서 태극기의 물결을 수놓으며 자유 해
방단세의 환호성을 소리 높여 외치던
그날 우리 온 겨레는 정녕 티끌만한
사심도 타산도 없는 순수한 애국애족
의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민족 재기
의 출발을 기뻐하였고, 우리 역사의
새로운 영광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고 잃었

던 조국을 되찾아,
—다시는 조상들이 당했던 불우한 처지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서하며,
—새로운 번영의 민족국가를 건설해 보겠다는 푸른 꿈을 펼쳐보던,
그날의 벽찬 감격과 불타오르던 정열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
될 불멸의 봉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어언 2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은 한 인간이 유아기로부터 소년기와 청년기를 넘어서 이
제 그 완숙을 눈앞에 바라보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민족 한 국가에 있어서도 그간의 성장도를 엄숙히 평가해
보아야 할 역사상의 이정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성년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고 있는 이 시
점에서 다시 한번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자못 무량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 25년 간의 한국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드물게 보는 「격동의 시기」였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광복의 감격과 환희가 국토 분단의 충격과 불행속에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하면,

번영의 희망과 기대는 복피가 도발한 참혹한 전란속에 한 조각 허공에 뜬 구름처럼 흩어져 버렸고,

나아가서 정부 수립이후의 혼돈과 정체는 급기야 두 차례의 정치적 격동의 소용돌이를 치루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타력에 의하여 주어진 광복을 분간 소화할 만한 주체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련과 진통은 피할 수 없었던 필연의 결과 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당하여 결코 좌절되지 않았으며, 역경앞에 끝내 굴하지 않았읍니다.

장구한 민족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았던 내외의 우환을 강인한 의지와 거족적인 항쟁으로 이겨내고 조국의 독립을 보전하여 왔던 굳세고도 역센 우리 민족 본연의 잠재적 역량이 시련 극복의 도정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싹터 오른 민족적 자각이 응결하여 잠자고 있던 생명력과 창조력에 점화되고 민족 중흥의 전진 대열을 정비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한 것이 바로 지난 60년대였습니다.

그로부터 8,9년, 우리들은 조국근대화 과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은 세계는, 50년대의 동란 한국이 이제 신생국 발전의 모범국가로 등장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선망과 경애의 눈으로 쳐다 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값 있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둔 외형적 성과보다도 이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무한한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큰 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과 긍지를 일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0년대에 착수한 중흥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할 사명의 70년대에 들어 섰읍니다.

새로운 4반세기의 역사의 장이 시작되려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지난 날의 역사적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의와, 우리 후손들에게는 보람찬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일층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 제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겨레가 너나 할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 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국토 분단의 비극입니다.

통일을 향한 민족적 비원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통일의 전망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에 가로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김일성과 그 일당의 민족 반역집단이 북한 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광신적이며, 호전적인 공산집단은 조국광복의 첫 날부터 전 한반도를 폭력으로 적화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광분해 왔습니다.

6.25남침의 참혹한 동족상잔에 이어서 휴전후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7,800여전이 넘는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고, 최근에는 무수한 무장공비를 남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증입니다.

정녕 김일성과 그 도당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범자들 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당은 언필칭 평화통일이니 남북협상이니 연방제니 남북교류니 하는 등 파렴치한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괴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청천 백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전범 행위와 긴장 조성의 책임을 전가해 보려는 저반하장의 흉계인 것이며, 무장공비 남파를 위장 은폐하고 소박한 일부 사람들을 현혹함으로써 감상적 통일론을 유발해 보려는 간사한 술책인 것이며, 국제여론의 오도를 노리는 야비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북괴의 작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

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무릇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는 기본 인권의 유린과 철의 기술에 의한 전체주의적 일당독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괴 김일성체제는, 같은 공산권내에서조차도 민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극좌 모험주의와 역사 위조를 일삼는 개인 신격화가 판을치는 폐쇄 사회입니다.

오늘의 북녘 땅은 그러한 전횡과 공포가 휩쓰는 가운데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하나의 병영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역사와 민족과, 천륜과 양심을 외면한 흉악한 무력도발집단과 대치하여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비원인 조국통일의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통일이 아무리 결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김일성 일파의 전범집단들이 끝내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통일 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 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화 물결에 의해서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나는 광복 4반 세기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이 자리를 빌어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북괴가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가면이오, 위장이오,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북괴의 명확한 태도 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무장공비 남파등의 모든 전쟁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금년은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19세기 후반의 개화기로 부터 근백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세기, 우리 민족은 낙후와 예속과 전란과 혼돈이 겹친 수난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시련을 용케도 참고 이겨 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중흥의 여명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증흥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서 시작되는 앞으로의 4반세기를 넘기면 금세기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2000년경의 세계와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을 좌표가 어디일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의 우리 조국은,

- 국토통일을 이룩한지 이미 오래된 강력한 민족국가로서,
- 온 국민이 다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풍요한 선진 복지국가로서,
- 세계사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한 그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1970년대는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 근대 민족사의 도정에서 민족 증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의 증흥과업을 성취하는 여부는 우리의 힘을 어느만큼 「생산적」인 목표에 집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단결, 힘의 집중, 그것은 정녕 민족 증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당면과제인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것도 민족의 단결이며,

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단결된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25년전 8.15에 구가했던 그 감격과 환희를 앞으로 기어이 성취할 조국통일의 그날, 보다 더 벅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단결하여 전진합시다.

1970년 8월 15일

대통령 박 정 희

발 간 사



국토통일원 장관 김 영 선

이제 국토통일문제는 그 차원을 달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 각하의 8·15 평화통일 구상이 선언되므로써 우리의 정당성이 국내외적으로 다시금 입증되고, 또 우리 국력의 신장에 대한 과시와 통일에대한 평화적 방법이 크게 환영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통일의 염원에 앞서, 우리의 국토는 왜 분단되었으며, 또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며, 이러한 애로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대 힘을 기울여야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민주 승공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바라는 국토통일이란 문화의 통일이고, 민족의 통일인 동시에 곧 국토의 통일인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은 누구의 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힘을 길러 성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대명제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 길은 오직 우리의 주체역량을 배양하므로써 통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의 달성에 직결되는 것이다.

국토통일원이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국민 여러분이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계몽 책자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널리 읽고 또 다른 이에게도 읽히어, 우리의 진정한 통일의 길은 어디에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의 생각이 한결같이 이룩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민주 통일의 길

—차 례—

제25주년 광복절 —박정희 대통령 경축사—	
발 간 사	
1. 분단국가는 왜 생겼는가	13
—그 경위와 공산화 전략 전술—	
가. 국제 긴장의 불씨	13
나. 동부 독일의 공산화	14
다. 「베트남」에서 공산 침략	16
라.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수단과 방법	17
마.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는 공산주의	20
2. 우리의 국토는 왜 분단되었는가	22
가. 조국의 광복과 38선	22
나. 「모스크바」 협정과 미·소공동위원회	24
다. 「유우엔」의 노력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27
3. 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가	30
가. 역사적 측면에서	31
나. 인도적 측면에서	32
다. 국가적 측면에서	33
라. 개인적 측면에서	36
마. 국제적 측면에서	37
4. 이것이 우리의 통일방안이다	40
가. 우리 통일방안의 내용	40
나. 우리 통일방안의 정당성	43
다. 북괴에 의한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의 거부	45
라. 북괴 통일 방안의 불순한 속셈	47

마. 가상적 통일론의 문제점	51
바. 한국 통일의 조건과 전망	53
5. 북괴가 주장한 남북교류의 성격과 경위 분석	57
가. 남북교류의 근본적 성격	57
나. 동서독 교류 문제와의 차이점	58
다. 북괴가 주장하는 남북교류의 목표	62
라. 북괴가 주장한 남북교류의 경위와 분석	63
6. 북녘은 어떻게 변했는가	68
가. 김일성의 정체와 이상화	68
나.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회	71
다. 조직에 얽매인 사회	73
라. 자유의 박탈	74
마. 강제노동 —주민은 배급단—	76
바. 이질적인 사회 —불신의 사회—	77
사. 주민들을 들볶는 각종 운동	81
7. 북괴의 무력책동을 분쇄하자	85
가. 해방후부터 6·25까지	85
나. 6·25로부터 4·19까지	86
다. 4·19에서 5·16까지	87
라. 5·16이후	87
마. 최근 만행 사례	89
8. 70년대와 통일 기반 조성	94
가. 국토 통일과 70년대의 중요성	94
나. 통일 과업 달성을 위한 선행 조건 조성	96
9. 8·15선언과 평화 통일 접근의 새구상	101
10. 한국 통일과 우리의 과제	107

1. 분단국가는 왜 생겼는가

—그 경위와 공산화 전략전술—



가. 국제 긴장의 불씨

공산주의 국가들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간에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적화의 꿈을 버리지 않은 한, 국제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긴장이 재연될 요소가 많은 곳이 바로 독일 및 베를린, 한국, 월남 등 분단국가들이다.

독일 국민의 요망을 외면하고 소련은 등부 독일을 영구히 그의 지배아래에 묶어 놓기 위하여

<세계 적화 야망에 광분한 소련의 붉은 군대>의 지배아래에 묶어 놓기 위하여 독일의 재통일을 시종 반대해 왔다.

더욱이 「베를린」의 봉쇄 등 자유 진영에 대한 압력, 혹은 흥정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나머지, 때때로 국제 긴장을 야기시켜 왔다. 최근 동부 유럽 국가들이 서부 유럽에 대한 접근 자세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 그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커 나간다면, 소련은 또 한번 어떤 형태의 국제 긴장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한국 또한 북괴의 재남침의 야망을 안고 있는 이상, 중요한 국제 긴장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짙다.

북괴는 1970년대를 이른바 그들의 대남 무력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로 보고, 모든 권력 조직을 김일성 일인 지배 체제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전 주민을 전쟁 준비에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국제 긴장의 불씨로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부당한 태도와 행동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 생활의 빈곤과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 국가에 공산주의 분자를 부식하고, 무장 반란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월남 사태인 것이다.

나. 동부 독일의 공산화

「나찌즈」독일이 패망하고 약 1개월후인 1945년 6월 5일 미국, 영국, 소련 및 프랑스의 4개국은「베를린」협정을 체결, 「베를린」지역을 이상 4개국이 각각 할당받아 일시적으로 점령하여 공동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 전체의 최고 공동 관리 기관으로 4개국 관리 이사회를 설치, 그 아래에 4개국 「베를린」군 사령관으로 구성된 「베를린」관리 이사회가 설치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동부 독일은 소련 점령군의 관리하에 들어가고, 따라서 「베를린」은 소련의 관리 지역 내 약 100마일 지점에 위치하게 되었다.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의 격화는 독일의 공동 관리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4개국 외상 이사회는 독일의 공동 관리 문제를 예외적으로 난관에 부딪혔고, 마침내 소련은 1947년 3월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개국측이 서부 독일의 경제적 통합에 관해서 독자적 방침을 실시하고 있다는 트집을 걸어 독일 관리 이사회의 기능 상실을 선언하여 이 이사회에서 탈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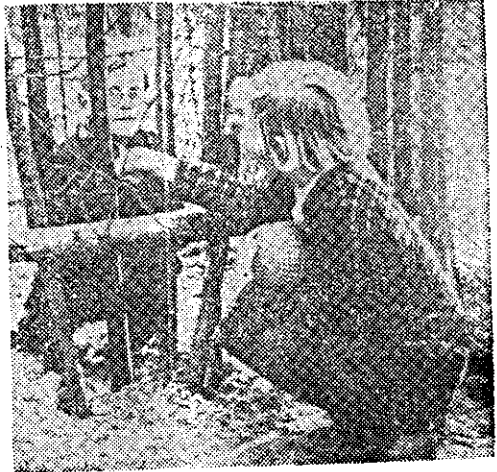
이어 소련은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개국측이 그의 점령 지역에서 새 통화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대항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같은 해 4월 「베르린」봉쇄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서방측 3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예정했던 통화 개혁을 그 해 6월에 단행했으며, 긴급 조치로서 「베를린」의 공중 수송을 개시하였다. 7월 초 소련은 「베를린」관리 이사회에 대표를 보내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4개국의 독일 및 「베를린」공동 관리는 완전히 정지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의 점령 하의 동부 독일 지역에서 1947년 7월 통화 제도의 개혁이 실시되어 새 통화가 발행되었다. 「베를린」시의회는 두 갈래로 분열, 서방측을 지지하는 시의회 의원은 영국 점령 지구에서 회의를 열고, 소련을 지지하는 의원은 소련 점령 지구에서 이른바 임시 민주주의 시 정부를 수립하여 종전의 시 정부와 대체시킨다고 발표하였다. 1947년 12월 소련은 동부 「베를린」의 새 시 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소련은 1949년 5월 마침내 소위 독일 민주 공화국 헌법을 채택, 10월에 실시하여 동부 독일의 공산화를 성취시켰다. 한편, 서부 독일은 같은 해 9월 독일 연방 공화국 정부를 설립하여 군정을 민정으로 바꿨다.

1949년 10월 동부 독일에 공산 정권을 수립한 소련은 군정을 폐지하고, 동서 독일의 양단을 현실화함으로써, 사실상 서방측이 요구하는 전국 국민 투표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대통령에는 공산당 당수 「빌헬름 피이크」가 선출되고, 2명의 부통령으로 기독교 민주당과 자유당 인사를 입각시켰으나, 물론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으며, 해마다 숙청 사태가 일어나 공산당이 외의 모든 정당은 그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었다.

공산당의 압제하에서 동부 독일인들은 서부 독일로 대량 탈출하게 되었다. 1947년에서 1954년까지 7년간 무려 122만명이나 서부 독일로 넘어 왔으므로 동부 공산 정권은 서부 국경의 감시망과 금줄 지구를 확대·강화하였고, 마침내 1961년 8월 13일 저 악명 높은 「베를린 장벽」의 구축 지령이 하달되기에 이르렀다.



<왜, 우리는 갈라져서 살아야 하나?
동심도 그 이유를 안다.-(동서독국경)->

독일 통일의 불가능성은 이 「베를린 장벽」의 구축 지령으로 더욱 기정 사실이 되고 말았다. 서부 베를린은 동부 공산 정권에 있어 「눈 위의 혹」격으로 동부 독일 탈출의 현관이 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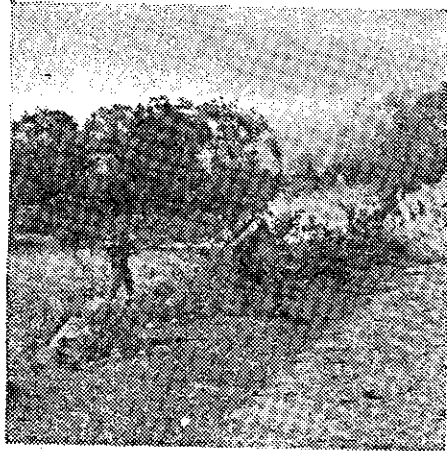
서방측은 서부 베를린으로 하여금 「서부 독일 번영의 소유원도우」로 만들었고 동부 독일 망명객을 흡수하는 입구로 사용해 왔다.

미국과 소련은 자기 베를린 문제로 대견 유발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베를린의 장벽은 기정 사실로 되어버렸고, 독일 분할의 비극은 이미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변하였다.

다. 「베트남」에서의 공산 침략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베트남」을 북위 17도선으로 분단하는 협정이 체결되자, 「하노이」 공산 정권은 수천의 선발된 공산당원들에게 남부에 남아서 「하노이」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약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들의 기본 계획은 남부 「베트남」을 전쟁 없이 공산주의 치하에 넣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



<세계 평화를 위해 용진하는 파월국군>

면 「베트남」 공화국(월남)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공작을 전개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교활한 전술과 끈덕진 공작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화국의 정치 정세가 안정됨과 아울러 국민의 반공 정신이 앙양되어 갔으므로 공산당 세력은 차례로 색출되어 갔다.

그래서 1956년 「하노이」 정권은 간접적 방법에 의한 남북 「베트남」의 공산화 계속이 실패되어 가자 무장 투쟁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노이」로부터 남부 「베트남」의 공산주의 분자들에게 무기와 군수 물자가 공급되고, 한편으로는 정치 및 군사 요원이 파견되었던 것이다.

1958년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무장 공산주의 분자들의 테러와 게릴라 활동이 증가되었고, 1961년에는 이미 「베트남」 공화국 정부 혼자 힘으로는 「베트콩」의 파괴 활동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군사 원조를 증가했으나, 1963년 11월 남부 「베트남」에서 「고 딘 디엠」 정권이 붕괴된 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베트콩」의 게릴라 및 모략 책동에 절묘의 기회를 주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1994년 8월 북부 「베트남」의 소형 함정이 「통킹」만 공해상에서 미국 구축함 「메독스」호에 공격을 감행하자, 미국은 이에 반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대규모의 전쟁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964년 말부터 「하노이」 정권은 연대, 사단급의 정규군을 속속 남부 「베트남」으로 증파하였고, 한편 미국은 북부 「베트남」으로부터의 병력과 군수 물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1965년 2월 북부 「베트남」에 폭격을 가했다. 이 때는 이미 「베트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북부 「베트남」과의 전쟁으로 발전되고 있었다.

「베트남」은 「하노이」정권 뿐만 아니라 중공, 소련, 북괴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아왔고 1965년 봄부터는 이들로부터의 원조가 대규모화 되었다.

이같이 「베트남」 전쟁이 국제화하게 되자 미국을 위시하여 대한민국, 「오스트랄리아」와, 「뉴우지일랜드」, 「타이」, 「필리핀」 등 우방국 군대들이 「베트남」 정부를 돕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자유 전영이 「베트남」을 돕고 있는 목적은 남부 「베트남」의 독립과 자유를 공산주의 침략자로부터 수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베트남」 전쟁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끝내려고 오래 전부터 협상회담을 계의해 왔다. 또한 1968년 3월 미국은 북부 「베트남」 및 비무장 지대의 폭격을 제한하면서 까지 협상에 응하도록 공산측에 촉구하였다.

공산측은 협상의 계의를 줄곧 반대해 오다가 이를 수락하여, 1968년 4월 13일 마침내 「파리」에서 평화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전쟁에서 이룩하지 못한 요구만을 부당하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회담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수단과 방법

공산주의자들은 침략의 방법으로 무력과 평화의 수단을 다 같이 중요시하고 있다. 무력으로써 공산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서슴치 않고 그것을 사용한다. 당장 무력으로 공산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한편으로는 미소 정책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공산화하는데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그 나라 공산당의 세력을 가르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자유 전영에 강력한 집단 안전 보장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무력보다 후자, 즉 간접 침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접 침략의 방법은 다종 다양하게 전개되는 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투적인 과정을 밟는다.

① 비 정치적인 문화 교류 실시

② 통상 관계의 수립과 발전

③ 외교 관계의 수립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는 정치하곤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과 맺는 문화적, 경제적 관계는 예외 없이 간접 침략의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다.

공산주의의 간접 침략의 대상은 주로 국제 긴장의 불씨를 안고 있는 지역이나 「아시아」·「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 몰려지고 있다.

그러나 분단 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 국가 발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 국가의 문화 교류, 경제 협력 관계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극력 저지하고 있다(아랍공화국, 알제리 등).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와 확대가 비교적 용이한 곳은 민주주의 혹은 민족주의 이념이 투철하지 못한 데다가 국가의 장래 발전에 미래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세계 적화론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구체적인 전술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력 폭동 전술(쿠데타, 폭력 혁명)

1960년 12월 소위 「모스크바」 성명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평화 혁명과 더불어 폭력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명에서 폭력 혁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하여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착취 계급이 인민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이라 하여 「새로운 형의 파쇼」 또는 「전제적 통치 방법」일 경우와, 공산당이 불법화 되었을 경우, 그리고 반공 의식이 강한 나라의 경우를 들고 있다.

② 프락치아 전술

합법적인 당 기관과 병행하여 비 합법적인 기관을 창설하고 합법 운동과 비 합법 운동을 결부시켜 정치 투쟁을 전개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비밀 당원이나 간첩을 목적 지역이나 대상국에 파견 침투시켜 합법적 신분을 보장 받은 후, 약선전·선동·태업·파업·정보 수집·나아가서는 전복 등 온갖 파괴 공작을 전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인민 전선(통일전선) 전술

인민 전선이라 함은 정치적 합작을 말하는 바, 이것은 공산당이 어떤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투쟁 대상에 대하여 뜻하는 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동조하는 정당이나 개인의 영향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평화 공존 전술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각국간의 평화 공존은 결코 계급 투쟁의 포기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바와 같이, 평화 공존의 조건 밑에서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계급 투쟁을 전개하여 침략의 유리한 가능성을 찾는 것이 평화 공존 전술이다.

⑤ 냉전 및 긴장 전술

공산 국가의 냉전도발 및 긴장 조성 행위는 대외적인 평화 공존 전술의 다른 한 측면을 구성하는 전술이다. 이것은 자유 세계의 역량을 분산시키면서 대내 정책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는 전술이다.

즉 대외적으로 국제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 강화함으로써 자유 세계의 관심을 공산권 밖에 끌리게 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항상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신화를 조작 유포시켜 자국내 인민들의 소위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증산 운동 촉진제로서 사용하는 전술이다.

⑥ 유격 전술

폭력 혁명의 강력한 수단인 하나이며, 지역이 광대하고 행정 조직이 미약하거나 저해 요소가 적고, 또 생활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정권 약탈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모택동의 유격전의 기본은 16자 전법인바, 즉

- i) 적진아퇴(敵進我退) (적이 진격하면 우리는 후퇴한다).
- ii) 적거아요(敵據我搖) (적이 점령하면 우리는 그 후방을 교란한다).
- iii) 적퇴아타(敵退我打) (적이 피로해지면 우리는 그를 공격한다).
- iv) 적퇴아박(敵退我迫) (적이 후퇴하면 우리는 그를 추격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침략의 한 방법으로서 민족 해방론을 내세우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침략의 대상이 저개발 국가들에 돌려지면서부터 공산주의 혁명의 「슬로우건」을 감추고 민족 해방 운동의 참된 벗인양 가장하고 그의 지원자로 자처해 나섰다.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서부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있었던 관계로 서부 「유럽」 열강에 대한 경제심과, 과거의 종주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점을 착안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부 「유럽」 열

강과의 유대를 끊으라고 사수하고, 나아가서 소위 민족 해방전쟁을 일으키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해방론에는 공산주의 '침략의 목적이 숨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공산주의자들은 이들 저개발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돌려 세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유 진영과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해 놓는다면, 세계적 힘의 균형 관계에서 자유 진영에 대하여 공산주의 진영이 유리한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적화 획책의 수단으로서 한편으론 국제 정세를 교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 공존을 내세우는 따위 미·소정책 등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다.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은 공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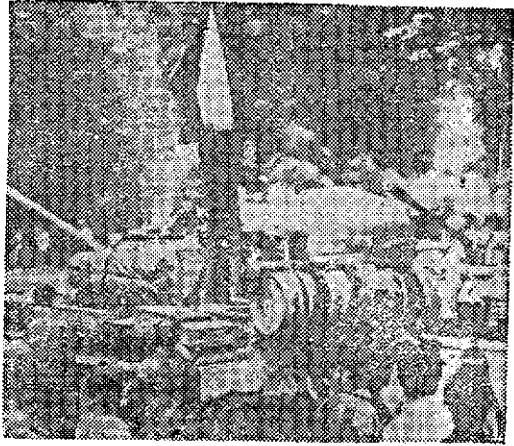
현재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일시적인 평화 공존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화 공존의 배경에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비롯한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역학적 관계가 공산주의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국제 정세는 다른 국면으로 발전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증극적인 목표인 세계 공산화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 의한 세계 지배를 저버리지 않은 한 이들은 그의 침략 정책을 집요하게, 그리고 악랄한 방법으로 계속 기도할 것이며, 자유 진영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교활한 양면 외교를 실시할 것이다.

최근 국제 관계의 다원화가 역사적 주체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공산권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지도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동



<소련군대 물러가라!,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적코의 자유민>

부 유럽 제국의 자유화, 민주화 운동을 군사적 위협으로 저지하고 있다.

한편 중공은 소련의 평화 공존정책까지도 자유 진영에 대한 투항이라고 비난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의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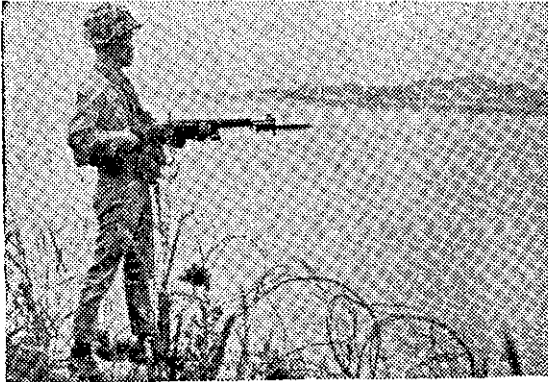
더우기 중공은 1966년 이래 소위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고, 종전에 전술 전으로나마 그의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중요시 했다면, 이제는 국가간의 관계는 제2로 미루고 주변 국가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무장 반란을 일으키려고 선동하고 있어,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위협을 가증시키고 있다.

북괴 역시 1970년대 초반기에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야겠다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혀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채동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적 위협이 가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투철한 승공 정신과 더불어 주체 역량을 경주하여 그들의 침략을 언제든지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동서독 국경에서, 동독 군인이 서독으로 탈출하고 있다.>

2. 우리의 국토는 왜 분단되었는가



가. 조국의 광복과 38선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 지 4천 3백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민족적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신라 왕조가 3국을 통일한 이래, 고려조

<동족의 비극, 국토 분단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소련과 북괴에 있다. >

이씨 조선을 거쳐 내려 오면서 단일 민족으로

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와 생활 관습을 누리고 왔음은, 우리의 역사의 기록이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토가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해서, 반만년의 찬란한 문화를 길러 보존해 오면서도 언제나 주변의 열강국들의 남진 또는 북진의 발판이 되어 온 숙명적 운명을 지녀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숙명적 운명을 지닌 우리의 국토는, 1895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의 노일전쟁에서 일방적 국력의 우위를 점한 일본의 북진정책, 즉 대륙강점 침략 정책의 제물이 되어, 드디어는 1910년에 이르러 일본의 식민지화를 면치 못하였다.

일제 36년간의 피눈물 나는 쓰라린 고통의 탄압정치를 거쳐, 우리의 선열들이 흘린 피의 대가와 보람으로,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이 일본 제국주의의 항복에 의한 연합국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되고 온 겨레의 숙원이던 조국의 광복은 되 찾았으나 그것은 우리 겨레의 자력에 의한 광복 독립이 아니었고,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타력적인 선물이었다는 데서 이 겨레의 역사적 숙명을 또 다시 아로새긴 채 남북분단이란 오늘 날의 민족적 비극의 수난의 씨가 싹트기 시작했

었던 것이다.

그런데, 연합국측은 제2차 세계대전중이었던 1943년 12월 초의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한국의 지위와 장래의 독립 문제에 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고, 그 후 대전 종결 직전이었던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와 공약을 재확인하였던 것이다.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게 될 것을 결의한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공약이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영·소·중의 당시의 4대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 한국의 독립 문제를 보장할 것을 원칙적인 합의에서 공약을 하였던 것이나 태평양 지역으로 쫓겨 나오려는 소련의 전통적인 대 극동 정책에 바탕을 둔 대일 참전과 미·영·소간에 체결된 「알타」 비밀 협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완전 독립은 즉각 실현되지 못하였다.

1945년 미·영·소 3대국의 거두들은 혹해 연안에 위치한 「알타」에서 모임을 갖고, 국제적인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한편, 소련의 태평양 지역 참전 문제를 논의하고, 극동 지역에 있어서의 소련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중 한국 문제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일본 제국주의자에 대한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고, 미국은 남한을 점령한다는 것을 「알타」 협정의 일부가 아닌 가협정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어찌면 국토 분단의 불씨가 되었는지 모르며, 소련의 영욕한 침략주의적 흥계에 미국과 영국이 말려든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소간의 이러한 합의는 한국내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항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군사적 목적상의 합의이었지, 결코 정치적 분할의 목적은 아니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의 투하로 일본의 군사력에 결정적 영향력을 주게 되자,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때야 말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대일 참전의 절호의 시기라 판단하고, 소련군은 드디어 동년 8월 9일을 기하여 극동에서의 군사 행동을 개시하였다. 8월 24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소련군의 관할 구역을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한다」라는 극적인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38도선 이북의 북한 전역은 사실상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 갔다.

한편, 미국은 소련군의 이와 같은 군사활동으로 보아, 소련군이 한국의 일부를 점령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 봉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련군의 점령지역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를 느꼈다. 이 때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소련이 한국 전역을 점령코자 한 야망을 수수방관 내버려 두는 결과가 될 것이며, 「카이로」선언의 공약도 허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5년 9월 2일자르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일반 명령 제1호」를 발표 하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은 미군이, 그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하여, 각각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로 확정, 구체화 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미 북한 지역에 진주하였던 소련군에 뒤이어 9월 8일에는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였다. 그러나, 소련군 사령관은 군사적 고려에 의하여 설정되었던 38도선을 남북한의 정치적 경계선으로 굳히는 한편, 그들의 침략적 야욕의 마개를 드러내 남북한의 경제 교류와 행정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게 되자, 군사상 목적의 임시 경계선이 정치적 분단의 인위적 장벽이 되고 말았다.

북위 38도선! 그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따르는 미·소 양군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지리학상의 편의에 따라 다만 지도상에 그려진 여러 위도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한 줄기의 위도선이 반만 년의 역사속에서 함께 생과 사를 같이 하여 온 태달민족의 국토를 양단해버린 정치적 경계선으로 되었을 때부터 우리들 5천만 겨레의 오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고 미·소 양 진영의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세계의 이목과 신경을 집중케 하였던 것이다.

나. 「모스크바」협정과 미·소 공동위원회

당초 군사적 고려에 의해 획정되었던 38도선이 세계적화와 평창에 혈안이었던 소련의 정치적 야욕으로 말미암아 군사적 고려 이상의 복잡성을 띠게 되고, 마침내 반 만년 역사의 문화와 전통을 지녀 온 단일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하나의 인위적 장벽이 되고 말자, 미군 사령관은 이러한 한반도의 경화된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소련군과의 교섭을 통한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교섭으로서는, 이미 굳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소련군의 음흉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침략 야욕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적 행정적 통일을 가져 오려는 미군 사령관의 끈덕진



노력도 헛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 차리고, 38도선에 의한 한국의 분할에 대한 문제를 미·소 양국 정부의 직접 회담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45년 12월에 미·영·소 3 개국 의상은 「모스크바」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이 「미소 공동

<신탁통치 반대를 외치며 자주독립을 갈구하는 국민들>
위원회」로 하여금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고, 한국인의 완전 독립을 지도하기 위해 최고 5년간의 미·영·소 중 4 대국에 의한 신탁 통치안을 제출토록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이 공약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우리 겨레는 일본이 패전하고, 연합국측이 승리하면, 곧 한국에는 독립 정부가 수립될 것으로 환희에 차 있었던 것이며, 한국이 독립 국가가 되기 전에 연합국에 의한 신탁 통치가 실시되리라고는 꿈에도 조차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 통치안이 발표되자, 좌우익 할 것 없이 전 정당·사회단체들은 앞을 다투어 다 같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거족적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때, 평양의 소련군에게 소환되어 갔던 당시 남노당의 두목 박헌영은 서울에 돌아 와서 갑자기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소련 일국에 의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거친후 소련방에 편입하겠다는 전민족 전율의 가공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놀란 우익 정당 사회단체들은 일치 단결, 거족적으로 쫓기하여, 비상 정치 국민 회의를 조직하고, 「모스크바」 협정에 일대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 싸고 좌우 양 쪽으로 민족이 분열되었을 때부터 「모스크바」협정에 의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과는 이미 뻔하였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5년간에 걸친 미·영·소·중 4 대국의 신

탁 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먼저 첫단계로, 미·소 양군의 대표는 남북간의 행정·경제 부문에 관한 항구적인 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2주간 이내에 미소 공동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1946년 1월 16일부터 서울에서 미소 공동회의 예비회의가 3주간에 걸쳐 15 차의 회의를 거듭하였으나, 분할된 양 지역의 행정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 조정을 시도코자 한 미군측의 제안이 근본적으로 소련군의 침략 야욕에 거슬렸으며, 남북간의 경제적 통합을 시도한다든가 경계선의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북한 지역에 있어서의 소련군의 절대적 지배권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한 소련군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 우익 세력은 소련군을 비난하고, 38선의 철폐를 방해하는 장본인이 바로 소련군이라 단정하고, 강력한 반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1946년 3월 20일부터 1949년 9월 21일에 이르기까지 2차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으나, 미·소 양측의 본질적 견해의 상충으로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 방안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동 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미국은 「모스크바」협정의 신탁 통치 조항에 대한 한국인의 거국적인 반대 의사 표시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소련은 끝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정당 사회단체만을 미소 공동위원회의 한국 임시 정부 수립 방안의 작성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기도하였다. 한편, 소련의 모든 선전 기관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남한의 모든 우익 정당 사회단체에 대해 맹렬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련의 의도와 태도는, 미소공동회의의 경험에서 사실상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모스크바」협정에 의한 구체적인 토의나, 미국측이 의도한 바와 같은 38선의 철폐나, 남북의 경제 행정 문제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의 개선이나, 전한 임시 정부의 수립 방안의 마련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련의 당면한 전략적 목표와 계략은 그들의 주구하에 놓여 있던 공산당의 지배하에 전 한국을 점령 지배하여, 그들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산 괴뢰정권을 세우자는 데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계략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잠정적으로나마 북한 지역을 공산주의자들의 기지로 설정하고, 대규모의 군대 조직을 통해 남한의 공산당을 지원하자는 데에 있었다. 모든 형편이 장차 소련측에 유리하게 되어질 경우에 가서 전 한국을 적화 통일해 버리자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음흉한 속셈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음흉한 제략이 눈 앞에 훔하게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오직 통일 독립 한국 정부의 수립을 위해 한국의 통일 독립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모스크바」 협정의 당사국인 미·영·중·소의 4개국에 의하여 직접 다루어질 것을 1947년 8월 26일 제안하였으나, 전 한국의 공산 적화 음모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소련의 거부로 좌절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하려든 미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차선의 방안으로 「모스크바」 협정의 당사국인 4개국 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든 노력과 시도도 소련의 시종일관한 일보의 양보도 없는 완강한 거부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소련의 기본적 전략때문에 1년 반여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는 파탄에 빠지고 한국 독립 문제를 둘러싼 미소의 냉전은 마침내, 국제연합의 무대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남북의 장벽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다. 「유우엔」의 노력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한국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나 또는 소련과의 직접 교섭이 한국 독립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된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한국의 독립에 관하여 「유우엔」총회에 상정이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우엔」총회에 상정함에 있어, 당시의 「마셜」 미국 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약 2년간 끌어 왔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소련측이 일방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채, 신탁 통치에 반대한 정당 사회단체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련에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수립을 기도한 소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말았음을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보고하였다. 그리고는, 미소 양측의 교섭에 의한 한국 문제의 해결 시도는 오히려 통일된 한국 정부의 수립을 지연시킬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을 한국 문제 「유우엔」상정의 이유로 드렸다. 즉,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그간에 전개되어 왔던 미소 양국의 냉전의 실패를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소련의 세계적화 제략의 정체를 세계 만방에 폭로함으로써, 「유우엔」의 힘을 빌어 한국 문제를 전후 처리 문제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 평화와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로 취급하려는 데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소련의 외무 부장이던 「비신스키」는 「마살」의 제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모스크바」 협정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 공격하였다.

「유우엔」의 통한 결의에 의거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전후 처리 문제의 일환으로서 「모스크바」협정에 의거 해결하려는 소련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 상치되는 가운데 9월 23일 한국 문제 심의 의사 일정이 제기되자, 「유우엔」총회는 소련측의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41대 6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써 한국문제의 처리를 「유우엔」에서 심의할 것을 가결하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러 「유우엔」에서의 소련의 입장이 훨씬 불리하게 되자, 그들은 한반도에 진주한 일체의 외군이 철수한 뒤에 한국 문제는 한국인 자신에게 일임하여야 한다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의 제안을 거듭 되풀이하였으며,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오늘 날까지 북파의 「유우엔」에 대한 태도로 시종일관되고 있다.

한국 문제를 둘러 싸고 「유우엔」총회에서 미소간의 실전이 수차 거듭한 끝에, 또한 소련과 그의 추종자들인 공산 위성 제국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 한국 임시위원회를 한국에 파견하여, 등 위원회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독립 한국 정부를 수립한다는 「한국 독립의 절차를 규정한 미국의 결의안」이 동년 11월 14일의 「유우엔」총회에서 43 대 0, 기권 6이란 압도적 다수로써 가결·채택되었다.

이 결의에 의거, 「유우엔」한국 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을 피수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38도선 이북의 소련점령 지역에서의 국연 한위의 입북을 반대하면서 남노당에 지령하여 선거의 반대와 국연 한위의 철수를 요구하는 맹렬한 선전 활동과 파피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소련도 국연 한위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 봉쇄 저지하였다.

국연 한위가 소련의 반대와 북한 입북 거부때문에 전국적인 총선거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르자, 2월 26일 국연 소총회는 국연 한위가 접근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키로 한 「유우엔」의 재확인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자, 김일성 박헌영을 일당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김구 김규식의 중간파 민족 지도자들을 역이용,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치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연극 각본에 꾸며진 청사진대로 단독 선거 반대, 「유우엔」 한위의 철폐, 미소 양군의 즉각 철수 등의 「슬로간」을 내걸고, 5월 10일에 있을 선거 방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유우엔」 소총회의 재확인 결의에 의거, 비교적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5·10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로 구성된 제헌 의회에서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되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수립,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 동년 12월 12일의 제3차 「유우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

한편, 남한에서의 「합법 정부」 수립에 자극을 받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식 날조 선거를 통해 소위 「최고 인민 회의」를 구성하고, 1948년 9월 8일에는 피의헌법을 채택, 그 다음 날인 9월 9일에는 소위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토의 분단 경위를 대충 살펴 보았다. 최초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패전 일본군의 항복을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접수하려고 설정했던 미소 양군의 군사 분계선으로 잠정적으로 설정되었던 위도선상의 한 줄인 38선은,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비극을 배태한 채, 정치적 양단선이 되었던 것이다. 즉, 미소 양군의 잠정적 분리 구분에 지나지 않았던 남북의 분계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 더욱 경화되어 갔고, 국토 분단의 현상은 단성화되었다. 그 후, 한국을 재통일하려는 「유우엔」과 자유 우방의 부단한 노력도 헛되이, 공산 침략자들의 방패 공작과 공산 적화의 야망 때문에, 오늘 날도 우리의 동포를 공산 학정의 신음속에 내버려둔 채, 국토의 재 통일이란 민족 지상 과업의 숙제를 풀지 못한 슬픔에 우리 겨레의 온 가슴이 꽂 메어 있다.

무방비 상태의 자유는 침략과 압제를 자초
하는 법이며, 힘이없는 정의는 불의의 노예가
되고 만다.

— '68년 함군 창설 박 대통령 치사에서 —

3. 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가



<해방, 이 기쁨, 우리는 다시 제2광복의 기쁨이 남아 있다.>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벽촌의 촌노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는 통일을 기원하는 노래까지를 흔히 들으면, 마침 통일이 우리 일상생활의 한 단면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 자못 흐뭇하기만 하다. 그러는가 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통일을 왜 해야 하고 통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문 자답하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국민들이 그런대로의 답을 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주는 때도 있어 자못 설섭한 때가 없지 않다. 특히 휴전선을 마침 국경선이나 되는 것 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북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치고는 너무도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깊이 스며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아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욱이 4천년

이나 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 문화 민족으로서 같이 웃고 즐겨 온 내민족의 일부가 북녘의 공산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모른다든가, 이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신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의미에서도 이는 한국 국민의 긍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국민답게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는가를 독자와 함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나라이다.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때 단군을 시조로 나라가 선지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고 그 동안 수차례 걸친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긍지를 지키면서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였고 그것을 널리 외국에까지 전파하였기 때문에 일찌기 유명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동녘의 해 뜨는 나라> 라고까지 격찬을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이나 영국 기타 일본, 소련보다도 몇 갑절이나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이 강산을 손질해 왔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어 왔음도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단일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으려는 국민의 노력은 한 시도 끊기지 않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이다.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하였기에 야수와 같은 이민족들에게 포위되어 온갖 침해와 시련을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분산 대립에서 통일 독립의 길을 꾸준히 이어 올 수가 있었다. 참고삼아 우리 민족이 이어 온 우리의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지금부터 천사오백년전 신라의 선민들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삼국 통일의 위업을 어떻게 달성하였던가를 살펴볼 때, 통일 성업을 위해 저마다의 국민들은 열사병공하는 충성심을 가졌었고, 모든 간난을 극복하는 민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으며, 적과의 대결에서는 용진무퇴하는 용기, 그리고 냉엄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슬기로운 지혜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여건을 종합하는 훈련된 화랑도가 있었기에 정치와 외교, 가난과 애로도 극복하고 통일 대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 과업의 성취는 약 200여년 동안 빛나는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왕실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무사 안일주의로 인하여 후삼국

이 다시 분렬하게 되었다. 그러나 면면히 이어온 국토 통일의 열과 길로
충만된 민족의 슬기에 따라 다시 왕전에 의하여 고려의 통일을 보게 되었
으니, 이는 우리 국민의 두번째의 통일로서 그 의의가 큰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대의와 충성은 하나의 국민의 열로 이어져 근세조선 500
년과 일제의 가진 탄압에도 발로되었다. 즉 근세조선의 경우 양반 계
급들이 무사안일을 탐내며 공리 공론을 일삼고 국가의 안위보다도 당리
와 사욕을 선행시키다가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당했었지만 이순신이나
의병들과 같은 국민의 단합된 총의로 인하여 국가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
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36년간의 일제통치하에서도 국민의 국가를 수
호하려는 노력은 그치지 않았었으니 3.1운동이라든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민은 단군성조를 모시고 태어난 단일 민족으로서,
동일한 문화전통을 이어받았기에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적 노력은 한시
도 그치지 않았고 면면히 이어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숙원이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남북통일은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요 조상의 빛난
열을 이어받은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며 사명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명
을 다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줄 용기와 지혜를 닦아야 하는 것이 우리이기
에, 한시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
며 외침인 것이다.

나. 인도적 측면

인간은 원래가 하늘이 준 인권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
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
일부가 복귀의 폭정하에서 신음하고 있으니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
지않겠는가……? 「철의장막」 하면 「크레믈린」 공산치하를 말하는 것이고
「죽의장막」 하면 중공치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현대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말이기도 하다. 여하간 철의장막이건 죽의장막이건간에 공
산 독재하의 이념은 모두 같은 것이기에, 폭력적인 수단과 행동이나 목적
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은 아마 삼
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산독재자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폭
력적 수단으로 천부의 인간자유를 탄압하고 말살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말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상 저명한 혁명가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



<헤어졌던 민족은 다시 재회해야 한다. 6.25당시 피난민의 대열>

을 달라」고 웨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유를 그들의 생명과 같이 지켜왔다는 사실은 곧 자유가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공산치하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혹사당하고 있다. 물론 자유가 없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겠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도 없어 고향과는 관계없는 벽촌에서 생활을 하여야 하고 가족과의 인연을 거의 끊다싶이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이니 그들의 생활이 그 얼마나 지옥인가를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은 물론, 생존권, 참정권이 거의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천부의 인권은 완전히 말살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인권의 박탈행위가 해방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녘 땅에 자유를 부여하고 이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구조하여야 할 입장이 곧 통일의 요청인 것이다.

다. 국가적 측면에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 안보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1) 안보적 측면

소련과 야합하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하려던 북한 괴뢰는 6. 25의



<고속도로, 국가발전의 이정표요, 승공
민주 통일 지름길이다.>

남침으로 인류사상 가장 비
남침 비극을 유발시키었다. 그
리고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소위 평화적 해결책
이라는 허울좋은 구실아래 휴
전협상을 제의하였다. 원래부
터 공산당은 허위와 기만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키 위한 활동
에 앞서 반드시 평화라는 간판
을 들고 나오는 것이 그들의
상투수단이다. 이와 같은 술책
이 곧 1953년의 휴전협정이라
보아 옳을 것이다. 그들이 평
화적 해결이라는 구실을 부
쳐 휴전협정을 제의하여 온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
기 어려운 흥계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들은 6. 25의 남침으로 미군
이 한국에 도착하기이전 일시에
부산까지 침공, 전 한국을 적화
점령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
나 뜻하지 않은 「유우엔」군의
진급 출동으로 그들의 목적인
바 한국에 대한 적화의 뜻을 이
루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공
산주의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
나고 보다 착실한 발전을 기하
기 해위서도 공산주의를 이 땅
에서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한반도내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공산주의자와 대치하는 한 그
들의 흥계로 보아 언제든지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2) 지리적 측면

우리 한반도는 대륙과 도서의 육교적 구실을 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를 전파하는 좋은 구실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반도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세의 침략의 대상이 되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잘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번영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외세를 막아 내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외세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퇴치하고 민주통일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 고대로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지하자원이 많기름이름이나 있고 남한에는 농·수산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을 살리는 길이 국가발전의 한 방법이 될 줄 믿는다. 즉 남한의 경우는 공업원료가 생산 능력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므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남북한의 지역적인 조건의 특수성을 살리어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부된 생활을 유지하고 국가적



<농업의 현대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노력은 곧 통일역량의 배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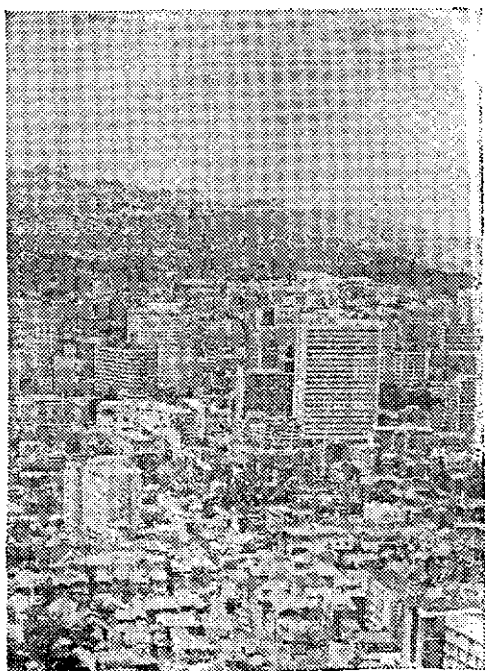
융성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한반도가 한덩어리가 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면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체제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도 승공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옛 속담에 소가 언덕이 있어야 기낼 수 있다는 격으로 좁은 지역, 즉 한정된 여건하에서 잘사는 길을 모색하거나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더 좋은 조건하에서 잘살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몇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진리인 것이다. 한 예를 들어, 통일이 될 경우 수풍뎡의 전기를 끌어다 남쪽에서 쓰고 남아 돌아가는 남쪽의 경공업품을 북쪽 지역에 공급하는 등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여러면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 한나라의 살림도 한가정의 살림살이와 다를 바 없다. 가난한 가계에 두 술을 붙이어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여 다 아는 것 처럼, 두배의 유지비가 든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한 국부(國富)를 감축내는 예가 너무도 많다. 이러한 대국적인 입장에서의 국가의 부를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하루 속히 우리의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를 축출하는 작업이 급선무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 개인적 측면

우리나라는 고래로 동방의 예의의 국가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지 않을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람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을 줄 모르는 인간으로 마비시킨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공산주의이다. 6. 25를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부모형제를 되는데로 학살하였고 개인의 재산을 다구 짓밟았으며 무고한 양민을 납치해 갔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부모를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죄없이 끌려가 강제수용소에서 고된 노력을 하다 쓰러져간 사람이 그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부모형제를 잃은 사람의 심정이 오죽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봄 직하다. 더욱이 부모형제가 북녘땅에서 고된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도 쓰러지는 줄조차 알지 못하는 비참함이라든가 한가족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상의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감수해야 할 아무런 임무도 부여받지 않고서 그 고통을 감수해

야 할 일장이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오직 통일의 성업을 완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통일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것이다. 자고로 우리겨레는 상부상조의 미력을 키워왔고 남의 고통을 나누어서 감수하는 데까지도 인색함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할 때, 비록 나의 가족과 친지가 북녘의 붉은 지옥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없다하더라도 남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하는데 서슴치 않는 것이 곧 우리 국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서 통일의 과업을 완수해야 되겠고 통일을 위하여는 너 나 할 것 없이 보다 대국적인 입장에서 일치단결하여야 하겠으며 우리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데 앞장서 주체역량 배양에 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발전이 곧 국가의 융성임을 명심하자>

마. 국제적 측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적화를 목표로 도처에서 전쟁을 유발시키어 왔고 아직도 세계평화를 교란시킬 분쟁의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근성이 버려 지지 않는 한, 한국과 같은 모든 분단국은 통일의 문제를 놓고 당분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겠지만 우선 국제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즉 한국은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을 맞게 되었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의 간제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래, 우리 국민은 주권을 잃고 가진 고생을 겪어야만 했었다. 그 후 우리 겨레는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지만—3. 1운동과 같은 민중운동을 위시해서 광주학생사건 6. 10만세운동등—이렇다할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의 승리와 우리 애국지사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온 국민은 해방된 흥분을 가라 앉히기에 힘들 정도로 기뻐 날뛰었고 온 국민은 이제 독립이 되나보다 하는 기대에 더욱 좋아했었다. 그러나 모든 기대를 뒤엎고 국경아닌 38선이 생기고 이를 경계로 미·소 양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민족의 비극은 다시 우리의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당들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적화공작에 여념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경아닌 38선은 민족 분계선으로 그어지게 되었고 민족통일을 기하려는 애국지사들의 고심초사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방태로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국제연합의 감시하에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이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이래 처음으로 민주국가를 수립하고 세계만방에 한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어 우리나라는 곧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성립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민지보루로서 양양한 앞날이 약속되었고 발전을 위한 국가적 기반형성에 박차를 가하려는 작업이 그런데로 순조로히 진행되었었다.

이와반면에 북한피퇴집단은 은밀한 계획아래 남침을 기도하여오다 1950년 6월 25일을 기해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의 통고를 받은 「유우엔」은 곧 「유우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하고 북침을 침략자로 규정, 북한 피퇴집단의 침략적인 전투행위의 즉시 종지와 피퇴군은 38선 이북으로 즉시 철퇴할 것을 요청하고 이 결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유우엔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유우엔」경찰군을 파견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유우엔」군의 협조로 3년만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통해—북한의 실지(失地)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오늘의 휴전선 이남을 되찾고 자유우방의 계속적인 지원을 얻어 그동안 파괴된 모든 전쟁의 흔적을 씻고 오늘의 한국이 되게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국제적 신의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들의 피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통일과업을 완수하여야 할 민족적



<울산공업단지, 경제발전의 표징>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특히 오늘의 세계가 예측을 불허할만큼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인접 국가인 중공이 극동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때인 만큼, 평화의 사도인 국제 경찰군의 노고가 이 땅에서 기어코 헛되지 않도록 통일 과업의 성취로 더 큰 힘으로서의 한국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자유진영의 민주 보루로서의 전위대 역할을 하여야 할 이 우리에게 부과된 임무일 줄 믿는다. 그럼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방공없이 자유없고

방첩없이 평화없다.

4. 이것이 우리의 통일방안이다



<세계 평화의 전당. 우리는 「유우엔」의 기능과 권능을 존중한다.>

가. 우리 통일 방안의 내용

남북통일은 우리의 국가 목표이며 민족의 비원이다.

그것은 우선 한국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유롭고 공명 정대한 남북 총선거 실시를 내다 보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이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유우엔」(국제 연합)의 부단한 관심사로 되며 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유우엔」의 감시를 필요로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반만년 역사상 처음 보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총선거 실시의 결과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토의 절반인 38선 이북 땅은 1945년 8월 이후 공산측의 강점하에 있었고 그들이 자유 총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토 양단 상태는 아직껏 타개되지 못하였다. 우리 민족은 그와 같은 부조리를 영원토록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민족의 자체준비와 국제정세의 유리한 배합이 이루어 질 적에 우리는 기어이 국토 양단선을 터 놓고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적 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떳떳한 참여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의 남북통일 방안은 비록 공산측 무력도발로 말미암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상당한 시련을 겪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일관되어 왔다. 우리 통일방안의 골자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그것은 유우엔감시하 토착 인구비례 남북한 자유 총선거 실시이다.

이 통일방안은 ① 1919년의 3.1 독립 선언문 정신에 완전히 부합되며,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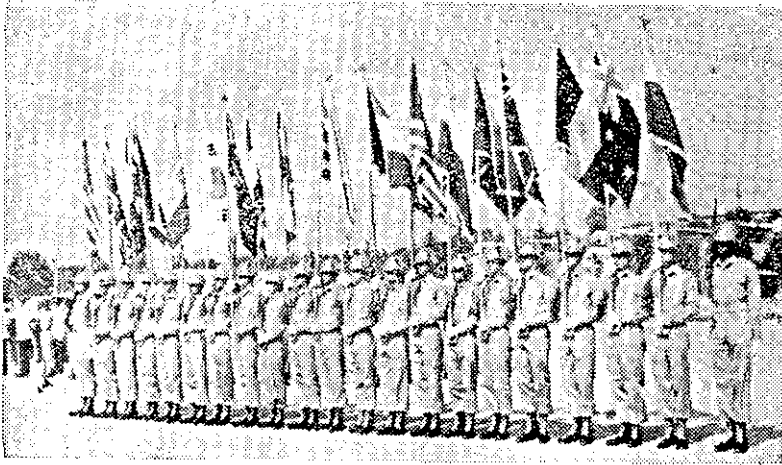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의 기조인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일치될은 물론, ③「유우엔」의 여러차례 결의로 천명된바와 같이 인류의 정의 공도에 어울리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은 확고 부동하다. 이점에 관해서는 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우리 통일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좀 더 풀이해 두어야 할 것이다.

①「유우엔」감시는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고 남한 지역에서의 공산당의 폭력 행사를 제거하기 위하여도 절대 필요한 것이다. 통일 총선거는 국제적인 세력 관계와 얽혀 있으므로 「유우엔」과 같은 권위 있고 권능있는 세계 평화기구의 공정한 감시가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유우엔」의 감시는 그 총회를 한국에 옮겨올 수 없는 이상 총회에서 뽑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시를 담당케 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유우엔」이 한국에 파견한 위원단은 (가) 국제연합 한국 임시 위원단(UNTCOK, 1947년 11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나) 국제연합 한국 위원단(UNCOK, 1948년 12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다) 국제연합 한국 통일 부총 위원단(UNCURK, 195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이다. 장차 남북 총선거 기운이 무르익게 되면 「언커크」의 규모가 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도 「유우엔」감시가 없으면 공산측이 선거에 협잡과 농간을 부릴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소련이나 북괴의 이른바 「선거」실태를 볼적에 그 우려가 현실적으로 된다. 예컨대 그들은 입후보의 자유를 인정치 않으며, 한 선거구에 오로지 한 사람만의 입후보를 내세우는데 그 인선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소위 「추천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투표장에 백합과 흑합을 만들어 놓고 찬성자는 백합에 반대자는 흑합에 투표하라고 한다. 이러한 흑백 선거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공산당이 입후보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내세우겠다는 것인데, 애당초 선거운동의 자유가 없을 뿐더러 투표장에 당 간부와 안전원이라고 일컫는 공산 비밀경찰이 나와 감시하는 까닭에 반대할 수 없는 것이 예사이다. 그러면서도 공산당은 선거 때마다 소위 99% 투표에 99% 찬성(때로는 100% 투표라고도 한다)이라는 등 허위선전을 일삼고 있다.

실정이 그리하니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면 「유우엔」감시가 꼭 필요한 것이다. 한편 공산당은 자유 총선거에 자신이 없으면 협잡이 어



<「유우엔」의 결의에 따라 6·25동란에 참전한 자유 우방 16개국>

려우리라 생각하는데서 「유우엔」 감시를 거부한다.

- ② 토착 인구비례라는 것은 각 투표구 또는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 수를 인구에 비례되게 하자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현재 남한 인구는 근 3천5백만이고 북한 인구는 약 1천5백만이니, 2배 이상이 남한에 살고 있다.

한편 북괴는 그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른바 지역 대등을 내세워 남과 북에서 동수의 대표자를 내어야 하는 양 떠든 바 있었다.

- ③ 남북한에 걸친 총선거라도 받아 들인다는 것은 우리측의 성의있는 최대의 아량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남한에서는 이미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때에 「유우엔」 감시하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리를 따지자면 북한만의 「유우엔」 감시하 총선거 실시로 충분하겠으나 남북이 갈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한 데서 우리가 참을성 있게 같이 총선거를 치루어도 좋다고 한 것이다.

- ④ 자유 총선거는 우선 보통선거, 직접·비밀선거라야 한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다면 모든 국민이 성별, 신앙별, 재산, 지식별 등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투표에서 1인 1표의 꼭 같은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대표자 선출은 직접적이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총체적인 자유 분위기 보장이 필요하다. 선거전과 선거 기간 및 선거후에 걸쳐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의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모든 주민의 기본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자유 분위기를 조성하며 감시하기 위해 「유우엔」 직원들이 마을 놓고 남북의 각 지방을 여행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당국이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 형성은 공산권의 가일층 내부 변화, 북한에서의 자유화가 전제로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성급한 기대는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자유 총선거 실시 없이는 평화적이고 완전한 남북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는 도리이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의 방안 못지 않게 그 조건형성이 중요하다.

나. 우리 통일방안의 정당성

「유우엔」 감시하 토착 인구비례 남북한 자유 총선거로 건국적인 국민 대표기구 즉 국회를 형성하고 통일적인 기본법을 마련 확인하는데 이어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우리의 통일방안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에 부합된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조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독립 선언문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인류 평등과 결부해 천명하면서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맞서 싸우는 민족정기를 세계 앞에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 경우에 옛



<비밀, 공명선거는 곧 민주주의 원리이다.>

원한과 일시적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각 개인격의 정당한 발달과 자유적 정신을 다짐한 것은 곧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말한다. 특히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호소는 남북 통일시기의 자유총선거 실시의 기조로 될만하다. 요컨대 3.1 정신은 독립 정신인 동시에 통일정신이다. 그 원칙을 저버린 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조인 자유 민주주의에 일치된다. 남북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봤으며, 또 세계 앞에 떳떳한 자유 민주주의가 통일 실현의 입각점으로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자유롭게 평등히 대우하며 해방시켜, 민족적 대가정속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번영을 건설해 나가자고 다짐할 뿐이다.

우리 통일방안이 「유우엔」의 이상과 합치된다는 사실은 오늘 날까지 일관되어 온 「유우엔」의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결의에 미루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유우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첫째 목적으로 삼으며, 아울러 인민의 동권과 자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달성, 각국 행동의 조정을 천명했다. 이 세계평화 기구는 국토 양단 국가와 특수한 중립국「스위스」 등을 일시 제외하고서라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가맹시키고 있다. 간혹 공산측 회원국의 방해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전 지구적 평화 기구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유우엔」이 한국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의 제2차 총회 때부터이다. 그해 11월 14일자 「유우엔」총회 결의는 한국 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조속한 달성을 돕고자 총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게 시리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으며 협의할 권한이 부여된 9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을 점령중이던 소련은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고 말았다. 이로 미루어 1948년 5·10 총선이 우선 남한에서 실시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6월 21일의 결의에서 북한 동포들이 국회에 보낼 대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 그 대의원들이 독립된 한국 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한 대의원들과 합류하도록 호소했던 것이다. 이어서 1948년 12월 12일 「유우엔」 제3차 총회는 임시 위원단이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 이 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부괴 공산군이 불법남침을 개시하자, 「유우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 날의 결의를 통해 북괴에 대해 적대행동의 중지와 북괴군의 38선까지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북괴군의 남침은 계속되었다. 소련은 그 이사회에 결석하였다. 6월 27일 안보 이사회는 군사적 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으며, 7월 7일에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에 집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유우엔」군이 발족했던 것이다. 「유우엔」총회는 10월 7일에 전체 한국에 통일·독립·민주적 정부의 수립을 실현하고 총회의 지시에 따라 구호와 부흥을 실행함에 있어 「유우엔」을 대표하는 국제연합 한국 통일 부흥위원단(언커크) 설치를 결의하였다. 오늘 날까지 「유우엔」군과 「언커크」는 대한민국의 가장 믿음직한 국제적 지지의 기둥으로 남아 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네바」 정치회담이 한국 통일문제를 토의했었다. 그러나 이 회담은 공산측이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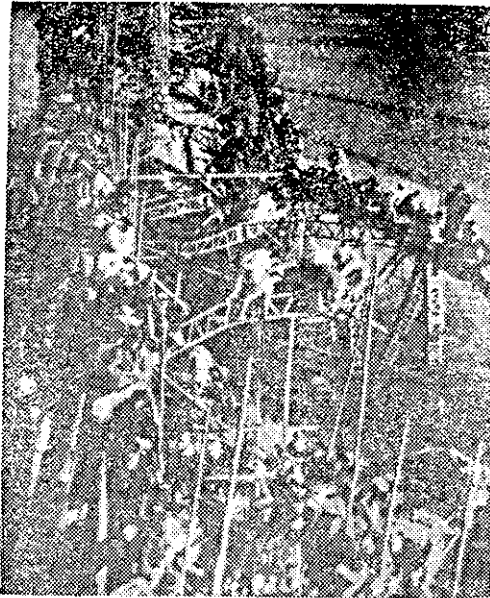
한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우엔」의 목적은 「유우엔」총회의 1954년 12월 11일자 결의에 명백한 바와 같이 대의제 정치하에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통일·독립·민주 한국을 수립하고 동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유우엔」의 입장을 풀이한다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 통일은 「유우엔」 감시하 토착 인구 비례 남북한 자유 총선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유우엔」은 한국 문제 취급에서 권위와 권능을 가지며, 문제 해결에 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③ 「유우엔」군은 「언커크」와 더불어 통일·독립·민주 한국의 수립에 의하여 「유우엔」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

— 「유우엔」의 그러한 목적과 입장은 진정한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의 희망과 이해에 완전히 합치된다.

다. 북괴에 의한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의 거부

「유우엔」의 한국통일 노력을 줄곧 거부, 방해해 온 북괴측 자세는 「유



<자유가 그리워 남쪽으로 피난길에 나선 월남 동포(대동강철교)>

우엔」 방식을 따르면 공산화 통일 야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자유 총선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산측은 외교·선전상 저들의 약점을 자체 폭로할 수 없기 때문에 색다른 구실을 내걸고 있다. 북괴의 주장에 의하면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즉, 「유우엔」은 그 자체가 외세이며, 「미국의 도구」라든지 「한국전쟁의 교전의 일방 상대자」로

되었다는 등의 발설이다.

그러나, 「유우엔」은 자유국가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까지 망라한 세계기구로서 결코 침략을 연상시키는 「외세」일수 없으며, 또 한 나라의 「도구」도 아니다.

나아가서 북괴가 「유우엔」을 가리켜 「교전의 일방 상대자」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마치 도둑이 경찰관을 가리켜 「싸움의 상대자」라고 말하는 투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권위」란 도덕적인 위신, 따라서 그 호소의 존중에 관련된 기대 가능성을 말한다. 또 「권능」이란 실제적인 활동 기능을 말한다. 북괴는 「유우엔」에 대해 그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려고 한다.

「유우엔」의 권위는 그 이상을 천명한 현장의 존엄성, 그 구성에서의 전세계적 망라성으로 설명된다. 또 「유우엔」의 권능을 받들지 않는다면 여러 나라들이 뿔뿔이 흩어져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국제적 무정부 상태속에 평화를 교란시키고, 서로 파멸을 재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우엔」과 한국 문제를 놓고 볼적에 그 세계 평화 기구는 1947년에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수립할 때 대한 책임을 맡았으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보게한 만큼, 한국에 대한 공산 복괴의 침략 행위를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전면 남침을 개시했고 「유우엔」의 경고를 무시하는 데 이르러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국제연합 한국 임시위원단은 인도까지를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복괴를 침략자로 규정지었던 것이다. 이에 「유우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대0, 기권 1, 결석 1로 침략에 대항하여 한국을 원조할 것을 전체 회원국에 호소했었다. 그에 호응하여 16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섰으며, 기타 40여개국 이상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원조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우엔」은 한국에서의 공산 침략을 저지시킴으로써 여러 나라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권위의 체모를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권위와 권능을 거부·반대하려는 침략 행위는 영원토록 후세의 세계 역사에 의해 규탄될 것이다.

라. 복괴 통일방안의 불순한 속셈

도대체 복괴는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을 거부하면서 그들 자신 어떤 대안을 내세우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김일성에 의하면, 복괴의 소위 시종일관한 통일 원칙은 자주·민주·평화의 세 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복괴 통일 원칙은 시종일관한 것이 아니며, 또 기만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선 복괴는 「자주」를 말한다. 그러나 1945년 12월에 수척스러운 「신탁통치」 찬성을 떠버린 것은 복괴측이 아니고 누구였단 말인가? 그때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세나라 외상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최고 5년기한의 4개국(미·영·중·소) 후견하의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한 바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우리나라 대표의 참여도 없이 외국인들 끼리 신탁통치를 한다고 결정했는데, 그러한 통치방식은 흔히 문명국이 미개한 야만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남한 각지에서는 민족의 분노가 용솨음치는 가운데 반탁 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었으나, 복괴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비위를 맞추면서 공산화를 준비하고자 이북 땅에서 반탁 운동을 벌이는 조 만식 선생을 비롯한 애국자들을 오히려 체포·투옥했던 것인데 그 따위가 바로 자주의 증명이란 말인가.

그 후, 소련과 북괴측은, 1947년 9월의 미·소 공동위원회 석상에서 비로소 자주를 떠버리며 1948년초까지 양국 군대를 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키고, 조선문제 해결을 조선인 자체에게 맡기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공산측의 탈주가 달라진 이유는 간단했다. 북괴가 남한보다 선수를 써서 군사력을 준비해 놓았으니, 조선인 자체에게 맡기자는 허울 좋은 구실하에 외국 군대가 철수하면, 남북간에 싸움이 붙고 소련무기로 장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북괴는 파염치하게도 민주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북괴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기본 인권도 인정치 않는다. 실례를 든다면 오늘날 북한 땅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절도 없는데, 이러한 혹독한 종교 말살은 공산권 치고도 북괴뿐이다. 그러한 판국이니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는 전혀 없다. 북괴의 소위 민주 선거라는 것이 악명 높은 흑백합 선거 연극이라는 점은 위에 지적한 바와 같다.

나아가서 북괴는 평화가 그들의 통일 원칙이라고 선전한다. 그렇다면 6.25 남침은 왜 했으며, 수백만 동포들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은 공산측이 아니고 누구였단 말인가. 하기야 북괴는 철면피하게도 마치 남한측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난 듯이 거짓 선전했었다. 그러나 준비없는 측이 준비된 측에 쳐들어 갔다는 사례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 북괴가 통일 원칙이라는 「자주」 「민주」 「평화」의 허위 기만성을 지적했다.

그 주제에 북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소위 평화 통일 방안을 선전해 왔다. 그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 협상론

이것은 1948년 남한에서 「유우엔」 감시하 자유 총선거로 대한민국이 수립됨에 앞서 북괴가 가장 소란스럽게 주장한 바인데,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반복·주장되어 왔다.

그 내용인즉, 공산계 및 용공계 또는 일부 감상적 통일론자들까지 합쳐서 「남북 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우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킨 다음, 임시정부를 즉시 수립해서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자기 힘으로 외국의 간섭없이 우리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1대 1 협상이란 언제나 무력을 준비해 폭력에 강한 쪽이 유리하게 마련이다. 북괴는 그 당시(1948년 2월 8일) 소련의 폭격기와 탱크까지 포함한 최신식 무기로 장비한 소위 「인민군」의 창건을 정식 발표하고 있었다. 아년게 아니라 48년 4월의 남북 협상차 평양으로 간 일부 남한 정치인들은 김일성이 보여준 「5.1절 열병식」에 질 접을 했거나 혹은 위압당했다고 한다. 그 무렵만 하더라도, 남한은 정부 수립 이전이어서 국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요컨대, 남북 협상은 북괴의 무력 정복을 미리 정치적으로 합리화 시켜주는 우려가 농후했던 것이다.

더구나, 오늘의 형편에서 6.25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과 남북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민족 정기가 용서 못할언어도단의 과오로 될 것이다.

(2) 무력 통일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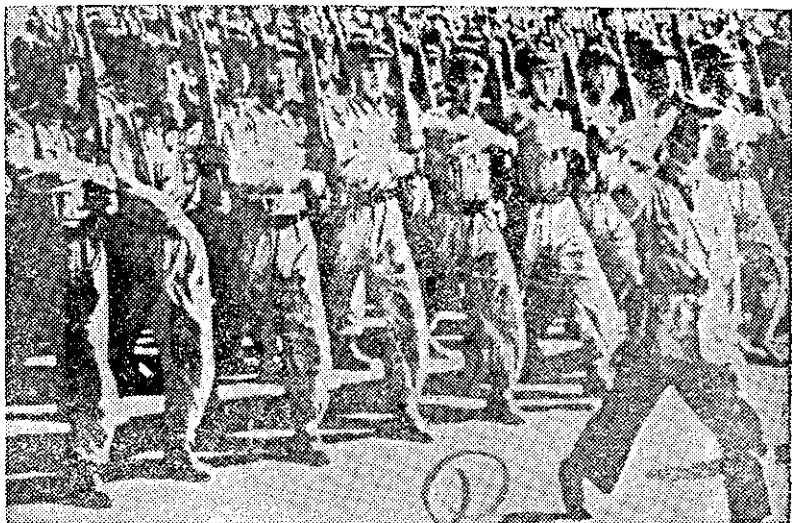
이것은 북괴 김일성 집단이 1950년 6.25 남침 개시후 3년간에 걸쳐 시험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방안이다.

—북괴가 1950년에 저질은 오산은 ① 국제 정세를 피상적으로 관찰한 데서 1949년 7월에 전부 철수했던 미군이 「유우엔」군의 주력으로 되어 재빨리 다시 상륙해 참전할 줄 몰랐던 것, ② 남한의 반공 역량을 과소 평가했던 것, ③ 남노당을 과대 평가하여 그 호응으로 쉽게 부산까지 내밀 수 있으리라고 잘못 계산했던 것 등으로 분석 된다. 또 북괴는 동족상잔으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게 하며, 전국민을 전재민으로 만드는 만행을 저질면서 오늘 날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만회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겼다 즉, ① 「유우엔」과 자유 진영의 공산 침략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② 공산만행을 실제 체험하는 데서 한국(남한)에 반공 사상을 보급하였다. ③ 지하에 숨어 있던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침 과정에 모조리 폭로되었고, 드디어는 공산당 조직을 송두리채 파괴하였다.

김일성 집단이 소련·중공의 사수로 저질은 6.25남침 죄행은 후세의 역사가 길이 규탄할 것이다.

(3) 중립국 감시하 총선거 방안

북괴가 1953년의 휴전에 이어 1954년의 「제네바」회담 때 내 놓은 방안이다. 그 골자는 「중립국 감시하 지역 대등 남북 총선거」 실시라고 요약된다.



<적화통일 당상에 광분하는 피뢰 김일성의 쫓개들(피뢰군)>

—중립국 감시관 「유우엔」 감시를 거부하려는 데서 나온 공색한 명분이었다. 그나마 북괴는 소련이나 「폴랜드」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공산국가들마저 중립국이라고 주장하는 형편이었다. 말하자면, 공산국가, 그리고 한국 사정을 모르며 공산당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대수되기 쉬운 일부 신생 용공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하에 협잡을 일삼을 수 있다는 타산이 깃들어 있었고 그나마 거부권 행사의 여지를 남겨 두려 했던 것이다.

또 북괴는 「토착 인구 비례」 대신 남북 「지역 대등」을 내세워 3분의 1 인구 밖에 안 되는 북한에서 남한과 동수의 대표를 내어야 하는 양 고집했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듯이 북괴는 원래 「이북 5도」인 것을 남한과 꼭 같이 도의 수를 느려 놓는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자강도, 양강도, 북강원도의 신설, 황해도를 남북도로 구분한 처사, 평양을 특별시, 개성을 직할시로 삼은 작난 등이 그 실례이다.

총선거라 했지만 공산측에 불리하면 소위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유보 조항」을 절차 문제에서 비치기도 했다. 하기가 공산당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자유 총선거로 집권한 예가 단 한번도 발

전된 바 없다.

(4) 연방제 통일 방안

김일성이 1960년 8월에 발표한 방안이다. 그해 4·19의거 후 남한의 정국이 불안한 데 편승하여 민심을 현혹시키려는 타산이 깃들어 있었다.

그 골자는 「과도적 조치」로서 완전 통일에 앞서 「연방제」를 하자는 것인데, 즉 남과 북에 현재 있는 정치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한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케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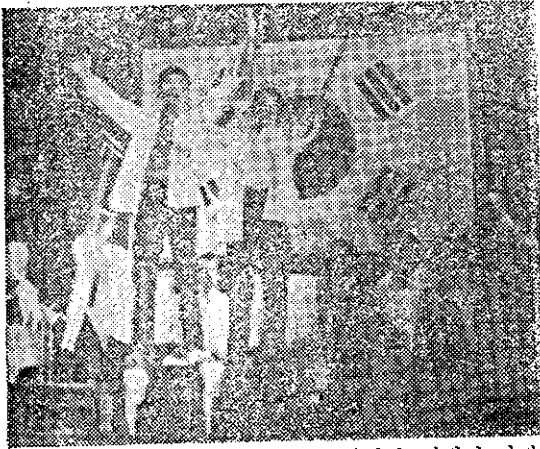
— 열핏 보아 새 맛이 있으며, 위협은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도, 간교한 음모가 그 밑 바닥에 깔려 있었다. 우선 그것은 「언커크」의 해체와 「유우엔」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인데, 남한을 무장 해제하려는 속셈이다. 또 연방제를 하자면 북피측 인원으로 하여금 간첩·공작원까지 자유롭게 왕래시켜야 할 판이었다. 물론 우리측 인원이 북에 가면 그곳은 철저한 폐쇄 사회이므로 계몽 활동의 여지가 없게 된다. 결국은 일방적 공작앞에 문호를 개방하는 꼴로 될 것이었다.

본질상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정치 제도가, 더구나 6·25 전범자를 저쪽 피수로 둔 채, 연방제를 형성해 화합하길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기껏해야 공산측 파괴활동에 보다 편리한 기회나 제공해 주는 한편, 우리측의 지원역량과 전쟁 억제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컸던 것이다.

이상 북피의 통일방안을 해방후부터 1960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분석, 고찰하였다. 북피의 최근 무력 도발과 관련된 그들의 새 소위 「남조선 혁명」론과 비정규전쟁 퇴색은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한국(남한)의 극소수 일부 인사들이 제창한 바 있는 색다른 통일 방안을 회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 감상적 통일론의 문제점

민족의 숙원인 남북 통일을 갈망하는 안타까움속에 우리 내부에는 일부나마 가끔 비 현실적인 감상적 통일론이 제기된 바 있었다. 특히 1960년의 4·19의거로 말미암아 48년 정부 수립이후로 거의 완전해 가까운 언론 자유가 부여되자, 통일논의도 「백화 제방」을 방불케한 바 있었다. 개중에는



<보라, 이 무질서, 우리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필요했다. (4.19후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학생들)>

국내 정치의 욕구 불만을 성급한 통일운동으로 발산시키려는 사람도 있었고, 개중에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호언장담을 정치적 인기 전술의 방편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발견되었다. 그러한 동안 「중립화 통일론」과 「무조건 협상론」 같은 것이 주목된 바 있었다.

(가) 중립화 통일론

이 주장의 골자는 한국의 국토양단은 본시 미·소 냉전의 결과이므로, 통일 한국이 그 어떤 세력권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불안을 주지 않는다면, 양대 강국이 모두 납득 하리라는 데 있다. 나아가서 통일을 위한 총선거의 감시는 공정한 제3자인 중립국을 골라 담당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아 이상론으로서는 타당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낱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을 미·소 대립 등 국제정세에 찾은듯, 하지만 그 이해조차 부족한 터에 국내 체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도대체, 중립만 표방하면 통일이 가능한 것일까. 「라오스」를 불적에 「비엔티엔」의 「푸마」정부도 중립, 「파테트·라오」도 중립이라는데 어찌하여 사실상 국토 양단 속에 내란이 그치지 않는가. 「캄보디아」의 경우 「시아누크」도 중립, 현재의 「론·놀」도 중립이라는데 그곳 전쟁은 어찌된 셈인가.

더구나 중공이라는 새 강대국 요인이 출현하였는데, 모택동·임포 지배하의 중공은 소위 「미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한다는데서 북괴로 하여금 전국 공산화에 치닫게서리 적극 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는 형편이다.

북괴는 북괴대로 김일성을 소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내부의 중립화를 절대 용허하지 않고 있다. 북괴에 의하면, 중립화란 북녘 땅에 「건설」한 사회주의의 뼈를 뽑고 그것을 자본주의와 중화시키려는 것이니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논법이다.

그러한 판국에서 남한만 중립화 바람에 휩쓸리게 하다가는 모든 보장과 원조를 상실한채 북괴 침략 앞에 고립을 드러내는 꼴로 되고 말 것이다. 기껏해야 새 동족상잔을 유발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공산측으로 하여금 무력 남침을 재개하는 데 유혹을 느끼게 할 따름이다.

(나) 「무조건 협상론」

이것은 4·19의거후, 한 때 극소수 학생들이 주장한 바 있었다. 같은 동족끼리니 남·북의 새 세태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울고 웃자」는 식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을 촉진하자는 정도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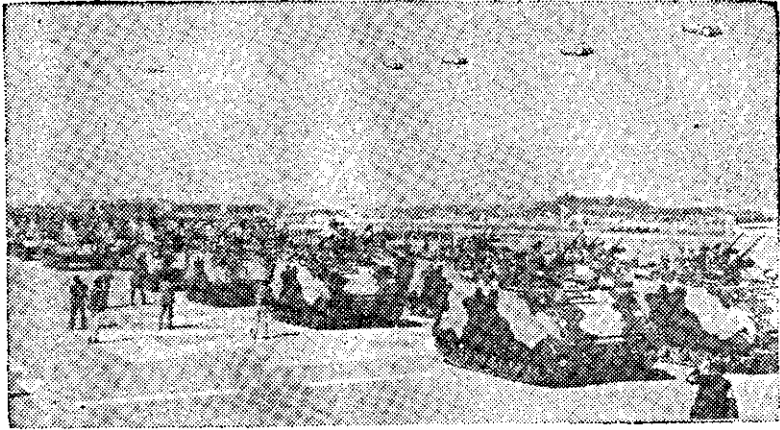
—그 심정은 감상적으로만 잠시 이해가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북괴에서 파견된 공산측 학생들은 「이데올로기」광신에 철저히 하며, 결코 기분이나 감상에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공산측은 끝내 남한측 일부 학생들의 감상에 편승, 한국의 대공 경각심을 마비시키며, 저들의 사상적 입장은 간직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본격적 진출을 시도해 급기야 북한측 공작원으로 하여금 모든 통제의 기틀을 장악케 하려고 들 것이다.

사태가 그렇게 진행되면, 일부 감상론자 아닌 다른 한국 국민이 가만히 방관할 까닭이 없다. 1961년의 5·16군사혁명은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울 것이 왔다」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 내부의 성급한 「중립화 통일론」이라든지 감상적인 「무조건 협상론」은 통일 접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적이나 일시 기쁘게 해 주고 우리의 민주 정치와 국제 지위를 후퇴 내지 약화시킬 따름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서는 「악인보다도 내부의 바보가 무섭다」는 말도 있다.

바. 한국 통일의 조건과 전망

1970년대에 접어든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북괴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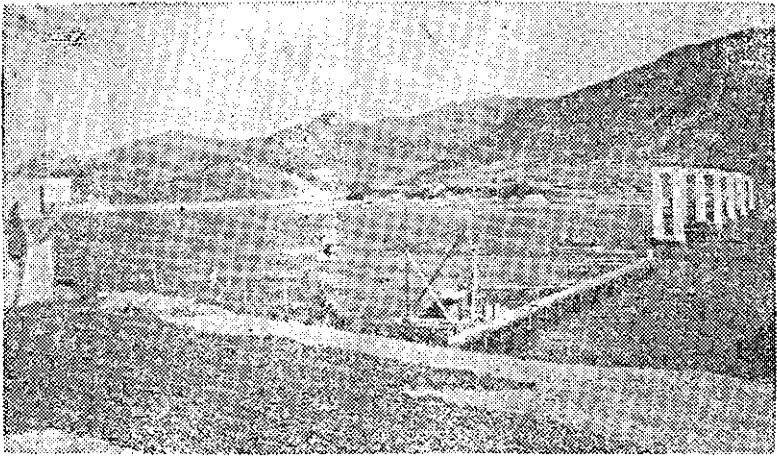
<60만 대군의 막강 세계 4위, 이제 국군은 성년 한국의 상징이다.>

부되어 있다. 여러가지 정조와 북괴 지도층의 생리로 미루어, 김일성 집단은 ① 비정규전 도발의 본격화로 소위 「남조선 혁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남한 내부의 무슨 봉기인양 허위 선전하다가, 다음 단계로는 이른바 「지원 요청」을 조작하여 적당한 시기에 「정규전」으로 결론을 내리고 광분할 가능성도 있으며, ② 혹은 주한 미군 철수 등 국제 정세의 추이를 보아 그들의 군사력이 우월하다고 타산하게 되면, 일거에 「정규전」 방식의 기습을 꾀하는지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측정되는 형편이다.

어쨌든, 북괴의 무력 도발은 단순한 파괴·방해 공작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공산화 통일 전략의 표현, 즉 소위 「남조선 혁명」 조작을 위한 「혁명적 대사변」 준비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괴의 최근 이론에 의하면 ① 소위 「남조선 혁명」은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② 그것이 달성된 후의 공산화 통일의 형식적 절차만이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북괴는 또 ① 종전같은 평화 통일 공세가 좀처럼 먹여 들어가지 않으며, ② 한국(남한) 국민들의 반공 사상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데서, 밀으로부터의 군중 공작보다도 밖으로부터의 무장 공비 투입을 통해 공포를 만연시키고, 모순을 격화시키면서, 그 조직을 확대하려고 꾀하는 데 이르렀다.

그와 같은 전쟁 위기 속에 우리는 통일에 앞서 우선 국가 안전보장을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일성 전범 집단의 침략 시도를 막아



〈싸우며 건설하는 조국 근대화의 새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내고 북괴의 전쟁 도발 책동을 억제하면서, 강차 북한 동포들을 자유 해방시킬 수 있는 실력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당면한 대공 안보와 거시적인 자유 통일은 일관된 우리의 노력 방향이다.

북괴의 반민족·반인간적 무력 도발 책동은 70년대 전반기에 걸쳐 줄곧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를 억제하고 극복하여 70년대 후반기에 이르고 보면 모든 정세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 자신은 72년부터 착수되는 제3차 5개년 계획을 완수함으로써 자립 경제의 터전을 닦고 자주 국방 자세가 튼튼해 질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의 실력 대비는 우리 편에 유리하게 된다.

다른 한편, 북괴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지고 말 것이다. 우선 70년대 후반기에 가면 북괴는 그들 나름으로 도발에 유리한 실질을 놓치는 꼴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정세의 격동은 70년대 전반기의 일이고, 후반기에 가서는 모든 것이 수습되고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김일성 집단은 70년대 전반기에 「대사변」이 일어날 것 처럼 떠돌아 왔던 만큼, 그들의 전쟁 「히스테리」와 그 동안의 희생에 관하여 북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 수 없게 되며 그 내부에 지도층 비난과 회의심이 자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밖으로 향했던 주의가 안으로 되돌

러지는 가운데 그 내부 모순에 대한 개혁 요구 내지 자유화 기운이 쏠리게 되게 마련이다. 결국, 북괴 지도층은 도발에 자신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요컨대, 통일 접근의 주도권이 본격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70년대 후반기 부터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시 민족의 한결 같은 비원인 남북통일이 분단 20여년을 두고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이상적인 통일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방안을 실천에 옮길 통일조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의 조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민족의 자체 준비(주체적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정세의 유리한 배합(객관적 조건)이다.

민족의 자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 추진 주체역량을 든든히 단결시킬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의 내부 변화, 즉 전범 집단의 퇴장과 자유화 운동이 필요하다.

국제 정세의 유리한 배합에서는 동·서 냉전의 해소와 모택동 퇴장후 중공에서의 내부 변화가 촉구된다.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 정세의 완화와 더불어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 여론의 지지도 중요하다. 이 경우에 우리는 앞으로 객관적인 조건 형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라의 통일 지혜를 상기할 수 있다. 삼국 시대에 북방에서 신라와 대치한 것은 강권 독제와 호전적 성격을 가졌던 고구려였던 바 결국 신라가 통일의 주체 역량으로 되었던 것이다. 정치력이 탁월했고 국민이 잘 단결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신라는 고구려 주민들을 다 같은 동포로 평등히 대우했고 힘을 합쳐서 평양에 나와 있던 의세인 당 제국을 압록강 저쪽으로 물러가게 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그러한 조상들의 빛나는 슬기를 이어 받은단일 민족이다.

통일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지만 앞을 내다볼 적에 총체적인 추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1945년의 8.15는 남이 가져다 준 해방이며, 국토 양단을 초래했었다. 앞으로 있을 제2의 8.15는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하며, 자유로운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5. 북괴가 주장한 남북교류의 성격과 경위 분석

가. 남북교류의 근본적 성격

한반도 전체가 한민족 공동체로서 「통일국가」라고 보면 남북교류란 아무 의미도 없고 그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단일민족이 이질적인 사회체제로 나누어져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가피 대결하게 된 것이다.

남북교류 문제는 한국측 통일방안에 대하여 유엔의 권능을 부인하고 있는 한갓 불법집단으로서 북괴가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서 1954년에 처음으로 주장해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된 평화공세를 더욱 빈번히 시도한 것은 4·19학생의거 이후이며 북괴가 주장하는 남북교류에는 서신교환, 기자교환, 경제문화교류, 가족접촉, 체육교류등 소위 액면 그대로 생각한다면 「비정치적」 면에서 남북교류를 위장하고 있다. 그리고 단일민족으로서 정치적, 「이데오로지」를 초월한 평화롭고 세계 인류로부터 호감을 살수있는 주장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세계공산화의 일환으로 남한의 무력적화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화를 시도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북괴를 위시한 공산 제국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천적 적용과 그들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뚜렷하게 위장전술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남북간의 교류의 뜻이 상기한 바와 같이 「비정치적」인 측면과 「비군사적」으로서 단일민족을 전제로하여 대립된 두 「이데오로지」를 초월한 사회기본적인 면에서의 상호접촉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현재로서 그 실현성은 극히 희박하다.

동서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호접촉 현상이 남북한에서는 존재해 오지 아니했고 북괴가 남북교류를 주장해 왔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목적이 다른데에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무력도발 사례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교류문제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서독간의 교류문제와 비교하는 한편 북괴가 주장하는 남북교류의 근본적 목적을 파헤쳐

보고 그 이면성을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나. 동서독 교류 문제와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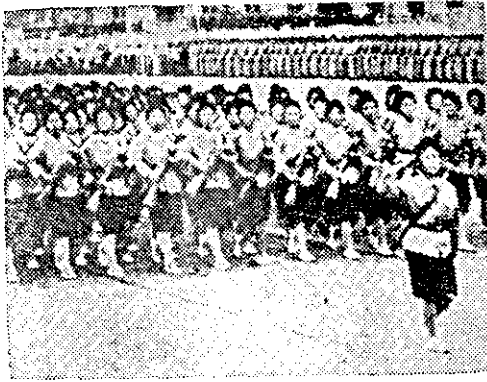
현재까지 동서독간에는 서신, 물자, 주민(동독에서는 제한된 노령자들만 허용)의 교류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남북한간에는 아직까지 그 어떤 교류도 전혀 불가능하였다. 그러면 왜 동서독간에는 제한된 범위지만 교류가 가능하고 남북한간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동서독과 남북한간을 사회 내면적 측면과 정치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동서독의 분단이 2차대전후 「자유」 「공산」의 두개의 이질적인 전승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져 동·서독이 각각 이질적 이념의 대결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본다. 그러나 동서독이 분단 이전에 단일민족, 동일한 기독교 문명권으로서 동질적인 사회체제를 공유하고 서양문명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반하여 동양문명권으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서양문명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던 과도사회도시의 분단이전의 한국의 상황은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

서양문명의 총체적인 이해도 있어 그들의 사고형태는 인간중심, 인간존중으로 생각해 왔으며 인간이 자연에 종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로서 세계와 자연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인간의 삶을 풍부히 하려는 가치관을 함유해 왔다.

이러한 사고형태는 자연 해석에 있어서 귀납적 방법을 구사하여 자연과학을 발전시켰고 기독교사상과 더불어 이러한 인간존중, 인간 주체위주의 사상은 인간의 평등사상, 민주주의의 발전을 초래케 했다. 이러한 개방된 사고 유형은 동서독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희생으로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지만 원초적으로 「비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동서독교류의 잠재능력을 내포했었고 실제 제한된 범위내에서 동서독교류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반도는 동양문화권에 속하여 한민족은 최근세까지 이에 따른 제가치관을 함유해 오고있으며, 이에 는 주로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사고형식을 내포해 오고 있다. 사실상 36년간의 일본통치에 한민족이 서구문화에 접할 기회가 약간이나마 주어졌었으나 실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에 따라 자유스럽게 서구의 문화에 접할 기회는 거의 없어 국민 대



<부녀자들까지도 전쟁으로 내몰리는 북파의 광분(노동적위대)>

지지 않았었다. 다시 말하면 동양의 사고 유형은 폐쇄성을 지닌 정치철학의 측면에서도 선(善), 인(仁) 이니 하여 모든 가치는 이에 종속되며 절대적 가치지향성을 획일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향적으로 확산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지향인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 지향보다 질서유지 지향적이고 계급의식에 집착한 사고유형을 남겨왔다.

이러한 폐쇄 지향의 가치지향이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의 노력을 통한과 더불어 자유세계와의 확대된 접촉은 국민들의 의식 구조면에 근대화된 면을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파는 세계적화를 목표로 역사적 오류를 내포한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고착하여 역사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의면하여 진정한 의미의 비정치적 측면의 남북교류는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불패에 동서독과 같이 분단이전에 이미 개방된 가치 지향성을 가진 서구 사회권에 속했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상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북파는 정치문화의 비유통성으로 인한 가치체계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포함하여 북파 김일성을 비롯한 북파 노동당의 정치 슬로건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무력적 적화통일의 고착된 「이데올로기」는 본래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이나 순수한 의미의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통일과 한국의 사회체계 분열을 목표로 한 가면을 쓴 위장된 전술로서의 남북교류를 제외해 왔다고 본다. 동서독과는 달리 남북간의 이질적 가치관의 차이는 순수한 의미의 교류에 큰 장벽이 존

부분이 전근대적인 사고 형식을 지니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기본적 가치 지향의 내용은 동양고유의 사상형태로서 인간이 자연에 예속되어 인간은 자연을 향하여 조화하면 되고 자연을 인간이 조작 내지 개발하거나 자연에 대하여 인간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가 보여

개한다고 본다.

다음에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동서독을 위요한 국제 관계속에서 동서독 상호간에 교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나를 이해하고 이에 비교하여 남북간의 「남북교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

통일독일의 문제는 독일이 위치한 그 지정학상의 특수성으로 세계전략의 중심지이며 동서 양진영의 힘의 균형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세계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동서독과 연합국인 4대강국(미, 영, 불, 소)은 다같이 독일 통일문제를 독일인 상호간의 국내문제로 간주하는데 의견일치를 모우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4대국의 합의가 독일 재통일의 전제조건이 되고있다. 독일의 재통일이 이러한 4대강국사이의 힘의균형을 깨뜨릴 것으로 간주되어 해결키 어렵다 할것이나 서독의 경제적 풍요성은 다른 서방 국가와의 이해관계의 긴밀성과 쓰련과의 경제적관계의 긴밀성을 노정시켰으며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소관계의 악화 즉 이념적대립 (소는 수정주의 로선, 중공은 세계적화를 위한 민족해방투쟁으로서의 무력혁명로선)과 국경분쟁등으로 소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의 감소는 그 배출구를 동구라파 제국에 돌리게 되었으며 동서독의 화해 조성을 도우므로써 중공으로부터 받는 은연중의 압력을 동구라파 내지 서구 제국가와의 긴밀한 관계정립을 모색케하고 있다. 이러한 힘의 관계와 더불어 독일의 통일문제는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다. 전후 동서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치열화 하여 소위 국제사회의 냉전체제가 확립되자 통독문제는 이에 따라 세계적 양극화 체제의 냉전적 축점으로 변모하여 왔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국제정치체제가 기왕의 냉전체제로부터 동서간의 평화 공존 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독일문제는 냉전적 성격의 태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화공존체제가 차원을 넘어 소위 동서 제휴체제로 지향하자 통독문제는 이에 민감히 적응하여 냉전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고 오히려 동서 화해의 실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부연하면 냉전체제하에서 서독의 통독정책은 「선통일 후평화」의 논리에 입각하여 힘의 정책으로서 동독존재의 부정과 동독의 고립화를 목표로했으며 동시에 서독 연방정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재통일을 주장하여 정치적 차원의 동서 접근은 부정 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비정치적 의미의 동서독 교류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허용되어 왔다.

다음 공존 협조체제에 접어들어서는 「선통일 후평화」의 입장을 버리고

「선경화 후통일」이라는 논리로 전환하여 소위 동독 「국법상 승인, 국제법상 불승인」이라는 독특한 제한적 승인 방식을 통해 동독존재를 인정하고 독일재통일을 모색하게 되어 동서독간의 기왕의 비정치적 교류에서 정치적 차원의 접촉단계로 까지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하게되었다.

이렇게 볼 때에 동서독간의 무력도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동서독간의 비정치적 차원의 교류는 당연한 논리의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상황은 동서독과는 달리 호전적인 중공과 더불어 한국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려는 북괴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부는 유우엔이 승인한 유일 합법성과 주권적 정통성에 입각하여 북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니 통한 정책의 기본성격에 있어서 냉전적 성격을 탈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당정부 때의 무력통일에서 제3공화국 수립이후 한국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이나 한반도 주변의 현 정세의 냉전적 성격과 더불어 북괴의 호전적 무력도발은 더욱 냉전적 태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북괴의 무력혁명을 위장한 평화공세로서의 남북교류는 통일정책에 있어 북괴 주장의 비논리적인 양면성을 뜻하며 미국정부의 신아시아정책에 의한 아시아 안보에 있어 아시아제국의 책임이 증대된 이때에 무력도발을 감춘 평화공세로서의 북괴의 남북교류 제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맞서 대결할 정신적 자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결국 동서독 관계에 있어 서독이 동독 접촉에 의한 자유민주주의로 동독 내 변화를 희망하고 동독은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법칙과 선동에 의하여 서독내의 변화를 희망하여 「이데오로기」의 대립을 내포하고 있으나 동서간 평화 「무드」에 편승하여 화해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 상기한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극한의 냉전체제에 머물러 있으며 만일 북괴가 현재 세계적 추세인 화해 「무드」를 이용하여 평화공세로서 남북교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평화적 통일공세로 환심을 얻고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고립화를 획책함과 더불어 북괴의 국제적 지위를 고취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이러한 틈을 타서 무력도발을 꾀하려는 북괴의 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 속히 북괴를 능가하는 제반 역량을 배양시켜야 한다는 것을 각성해 주고 있다.

다. 북괴가 주장하는 남북교류의 목표

당초부터 한국의 분단을 목적으로 소련이 수립한 북괴정권은 미·소양군의 철수로 한반도에 힘의 공백상태가 조성되어 있는 틈을 타서 건 반도를 무력으로 공산화 하고자 소련의 원조하에 군비증강에 광분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소위 평화통일 공세를 취했던 것이다. 즉 1949년 6월 25일 평양에서 소위 남북한 71개 정당, 사회단체대표의 참석리에 결성되었다는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은 동월 28일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다음해인 1950년 6월 25일 불법남침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유엔군의 참전과 한국군의 용감한 반격은 북괴의 이러한 무력통일 정책에 떠아픈 교훈을 주었고 자유 세계로 하여금 세계적화를 궁극 목표로 하는 공산제국의 본질을 재확인 시켰던 것이다. 6.25는 북괴의 어떤 평화공세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면성의 폭로는 물론, 이제는 전범 집단으로서 그 죄과를 씻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의 협상공세는 그후의 무력도발과 상관성을 맺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준 것이다.

4.19 의거로 기존 질서체계의 와해에서 오는 무질서와 사회적 불안은 결국 혁신계의 대두와 더불어 다양한 통일논의를 과도정부 기간중에 속출시켰다. 그후의 민주당 정부는 기존 통일방안을 천명했으나 일관성없는 종립화 통일론 내지 「남북교류」의 혼미속에 그 난맥상을 나타내, 이러한 일관성없는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편승 이를 역이용하기 위하여 북괴는 「평화통일」내지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므로써 국제적인 선전효과와 남한에 대한 교란공작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 당시 북괴가 주장하던 통일정책의 내용은 단계로 구분되며 제1단계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한 무력불가침 및 남북한간에 「경제문화교류」를 개시하자는 것이고 제2단계로서 남북한의 정치·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연방제를 형성하고, 제3단계로서 일체의 외세를 배제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그후 1966년 「남북협상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대체로 같은 내용의 통일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공산화 통일은 불가능하고 인구의 열세로 「유우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는 북괴에 불리하므로 북괴가 주장하는 남북연방제의 제시도 「인구비례」의 총선에 대비키 위한 공산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1단계에서의 핵심인 「남북교류」의 기본목표나 그 이면

적 성격은 「최종적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다」라고 북괴정권의 기본목표를 규정한 노동당 당규제1조에서 볼 수 있는 평화통일공세의 가장된 구호에 불과하고 그들이 소위 부르짖는 「결정적 시기」가 오면 무력통일을 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북괴는 그들 고유의 평화통일 논의나 남북교류 제의를 세계적인 「평화공존무드」의 조류에 편승하여 남북교류를 주장하므로써 남한의 제반 계층과 일반대중의 통일논의의 분산을 초래케하여 국론 분열을 야기시켜 남한에 대하여 북괴 기지강화를 촉진시키고 동시에 대남 진보건설활동을 적극화시키려는 저의가 뚜렷하다고 본다. 동서간의 긴장완화와 경제적 유대 강화추세에 부응하여 북괴는 중립제국에 무력중대를 획책하고 최근에는 몇몇 친서방국가에까지 무역관계를 개척하므로써 국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유우엔」내의 신생제국, 중립제국의 발언권 증대와 이들 제국과의 유대 증진을 통하여 「유우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를 곤란케하여 「남북한 동시초청」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2개의 한국」관을 부각시켜 한국정부의 고립화를 촉진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괴의 평화통일 내지 평화 공세나 남북교류 라는 구호는 한갓 북괴의 최고 전략인 남한의 무력적화를 목표로 남한내의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통일방안인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와 한국의 유일합법성을 국제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라. 북괴가 주장한 남북교류의 경위와 분석

북괴가 주장한 남북교류의 제의를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결부하여 몇 단계로 구분하면서 분석하려 한다.

(1) 1948.9-1954.4

이 당시 특징으로 공산측은 아시아의 정치적 공백상태를 이용하여 소련을 주축으로 국제공산주의 운동 대열을 확대하려는 태도를 노정하여 이에 대처한 미국은 대소봉쇄전략체제로 전환, 대한민국은 유엔감시하 5.10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유우엔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정세하에서 북괴도 8월 15일에 그들 대로의 선거(공개선거)를 실시 9월 9일에 피뢰정권을 수립하여 합법정부를 자처했으며 동시에 1949년 6월 26일~28일에 조국통일 민주전선」을결성하여 미군철수, 남북협상을 주내용으로하는 「평화통일」방안을 제의 해 왔다. 이런 대대적 정세와 더불어 미

국은 1950년 1월 4일에「태평양 안전보장선」인「에치슨 라인」을 공포하여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지역 밖에 있음을 시사하여, 이에 절호의 기회를 얻은 북괴는 표면상 평화공세를 일층강화하면서 무력 남침 계획을 은폐하는 데 주력해 왔다. 즉 이 시기에 있어 6.25남침 시까지 강력한 평화공세를 표면상 남북간의 제후 문제로 크게 내세우면서 극동에 조성된 정세를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대거 무력 남침을 개시하였다.

(2) 1954. 4~1956. 4

북괴는 6.25남침을 계기로 초토화된 북한을 복구해야할 시련을 격게되었다. 그러므로 북괴는 쓰련과의 경제·기술협정을 체결하고 진정북구사업에 치중하고 1954년 4월 중·소의 협의에 따라서, 60만 군대의 저편성을 보장받고 전비 축적에도 광분하였다. 이러한 대내적 준비를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대내적인 철수 문제를 포함한 외세 배격문제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평화공세를 위하여 1954년 4월 27일 「제네바」회의에서 남일」은 남북간의 경제 및 서신자유, 과학·문화 교류 및 기타 관제를 설립하며 그를 발전시키자고 제의하여 평화적 통일공세를 취했으며, 그외에 1954년 10월 30일 북괴「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회의와 1955년 3월 9일 북괴「최고인민회의」 제9차회의의 선언문, 1955년 8.15 10주년 경축대회에서 김일성의 통일방안등에서 평화통일 공세와 더불어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 통상, 통행, 서신교류의 개시등 비정치적 측면의 「남북교류」를 제의해왔다.

(3) 1956. 4~1960. 4

이 당시 국제정황을 살펴보면 1956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호루시초프」가 감행한 「스타린」 격하운동은 종래까지의 일인독재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극체제에서 다원체제로, 동서간에 평화공존 「무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4.19의거 이후 사회적 혼란을 틈타 분산된 통일방안의 대두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북괴는 전단계에서와 같이 6.25전쟁이후 재산상 또는 인적손실의 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전후 복구작업을 계속시켜야 했다. 이에 관련하여 북괴는 경제개발의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 평화적 통일을 강력하게 제기했으며 동시에 남북교류를 제의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1956년 7월 3일 북괴「재북 평화통일 촉진위원회」결성대회의 선언문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남북정권당국, 국회 혹은 모든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애국 인사들은 평화적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설기관을 설치하고……남북간의 상호접촉과 이해를 조성하고 서신과 주민의 왕래 경제·문화·예술·과학의 교류를 촉진시킬 것 등의 평화공세를 제의 해 왔으며 1957년 9월 30일 북괴「최고인민회의」 제 2기 1차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문과 1958년 2월 5일 북괴「정부」성명 및 1958년 9월 8일〈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대회보고, 1959년 10월 20일 북괴「최고인민회의」 제 2차 회의에서의 남일의 연설에서 「남북교류」를 내용으로 한 구체적인 제 교류를 제안해 왔다.

(4) 1960. 4~1965. 4

이 때에는 공산내부에 있어서의 분주화 현상,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제국의 유엔가입, 미·소 협조체제의 농후화, 이러한 다원화 현상에 편승하여 북괴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한국의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저지하려는 외교 전략을 펴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아기된 4.19 학생의거, 과도정부 그후의 민주당 정부를 통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국제 사회에서의 호감을 사고 한국의 사회적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하기 위하여 무력 통일을 가장한 평화공세를 더욱 가열화시켰다. 1960년 8월 14일 8.15경축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1960년 11월 24일 북괴「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대한민국 국회에 제의한 내용 등 기타 수차의 제안에서 「남북교류」등 평화 공세를 시도했다.

이 당시의 한국의 정세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평화공세라고 그들은 주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북괴의 주장 즉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의 반혁명 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혁명 전쟁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무력도발의 저의를 피력한 바와 같이 평화공세의 음흉한 이면성을 명백히 이해 할 수 있다.

(5) 1965~현재

중·소분쟁의 격화에 따라 북괴는 중·소 사이에서 외교적인 방황을 하게 되었으며, 1965년 6월 22일 20여년을 끌어오던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가 한·일 조약 및 제협정이 조인되므로써 한일과의 유대강화, 동년 2월에는 월남에서 미국의 북폭이 단행됨으로써 월남전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더하여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북괴로 하여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했

으며 이러한 국제정황에서 북괴는 중래의 통일방안에서 투쟁적 요소를 더 첨가시켰다. 즉 북괴는 남한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이 적절히 배합된 공세를 취하여 이러한 기도 전환에 따라 최초시기에 있어서는 부분적「남북교류」를 강력히 제기하여 1966년 5월부터 8월까지 문화인·기자 및 과학자 교류 등 총 21건의 「비정치적」 교류제의를 해 왔다. 이러한 평화공세와는 달리 휴전 으로부터 현재까지 7,800건의 휴전협정 위반과 각종 만행을 보와도 그들의 어떤 평화공세도 위장된 것이며, 어떤 교류도 악이용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괴가 주장해 왔던 「남북교류」의 내용인 서신교류, 경제·문화교류 기자교류 등 이러한 비정치적 사회 문화측면의 북한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과의 차이점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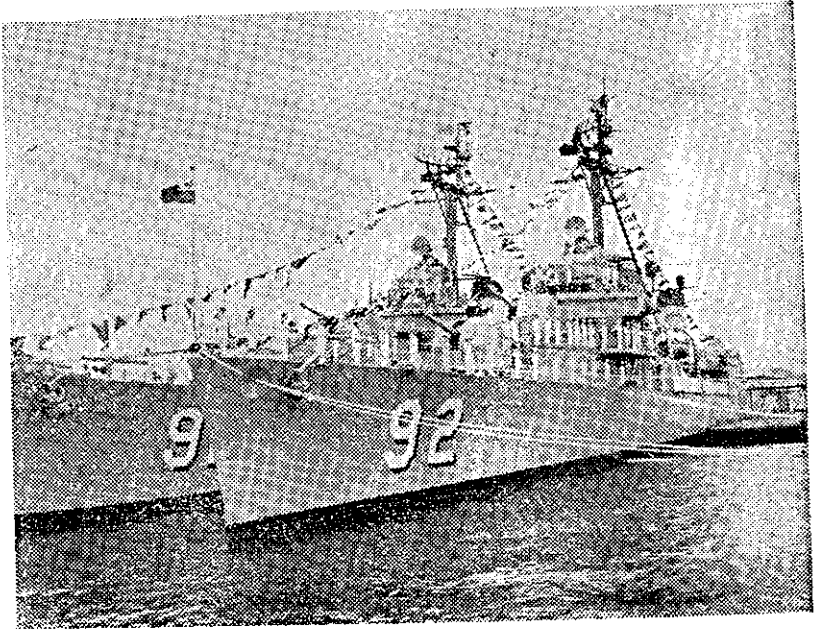
북괴 정치조직의 특성은 단일정당인 북괴「노동당」에 전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 정치이념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적화를 위한 무력혁명적인 교착된「이데올로기」로, 모든 가치는 이 「이데올로기」에 흡수 내지 이에 종속되는 실정이며, 권력구조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재체제에 있어 국민은 이 하향적인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는 식이다. 결국 정치체제가 가장 우선하여 기타 사회·문화체계는 완전히 이에 종속하여 그 자율성이 부정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정치적「이데올로기」에 문화활동, 내지 사회활동이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회기본적활동이 오직「마르크스·레닌」주의 즉 공산주의 이념의 실천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다. 원래 이러한 사회기본적 활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종속할 수 없는 본래적인 자기 활동 기능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자율적 창조성이 완전히 부정된다.

이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형정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 및 사상체계가 각기 독립성을 유지 자발성을 가지며 자기 본래의 기능을 억제당함이 없이 창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단지 이러한 문화 내지 사회활동의 유기적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회전체의 발전에 조응하도록 각 체계를 조정협조해 줄 뿐이다.

이러한 결과로 북한의 언론이나 문화활동은 완전히 정치에 귀속되며 인간의 다양한 가치관에 따른 활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의 실천을 위한, 즉 이러한 획일적 가치관을 위해서만 활동하고 그 본래의 자유가 억제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 출판 내지 제 사회문화 활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실정파 이와는 이질적으로 제 자유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차이는 현격

하다고 본다. 북괴가 주장하는 비정치적인 면의 「남북교류」는 북한 현실과는 모순되는 점이며 이러한 자기모순을 회생하면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이면에 무력적 도발을 꿈꾸고 있고 실제 그러했다고 위에서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이질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만일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측면의 자유스런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내지 역이용하여 북괴의 정치이념을 이식 내지 강압적 수단에 의거 주입시킬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북괴의 저의를 인식하여야 한다.



<3년의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 적은 침투할 곳이 없다>

숨은 간첩 찾아내고

자수 간첩 도와 주자

6. 북녘은 어떻게 변했는가

가. 김일성의 정체와 이상화



북녘 땅은 소위 공산당이라는 노동당 독재하에 놓여 있고, 독재자인 노동당은 김일성 일당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그러면 1,300만이나 되는 북녘의 주민들을 손아귀에 넣고 쥐어 흔들고 있는 김일성이라는 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독재의 아성을 유지하게 된 그 내막을 살펴 보자.

(1) 김일성이란 어떤 자인가?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金成柱)다. 그는 1912년 4월 15일 평

남 대동군 용산면 하리 철골마을 부녀자, 남자가 해야 할 일까지도 도맡는다. > (만경대)에서 부유한 농가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김형직(金亨稷)은 평양에 있는 기독교계 승실학교를 다닌 일이 있으며, 일찌기 만주 동북지방으로 이주하여 무허가 약종상을 경영한 일이 있다. 또한 김형직은 기독교 신자인 김반석(康盤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김성주는 조부밑에서 기독교계 사립 소학교인 「창덕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를 찾아 만주로 건너가 무송 「제1우급 소학교」를 졸업한 후 「화성의숙」이라는 중학교정을 중퇴한 후 공산당이 쉐 중국인 학교 「육문중학」에 다니면서 공산주의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1919년 10월에는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공산주의자로 출발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중국공산당의 만주지방 항일 유격대의 줄거로서 따라 다녔다.

이러한 김성주가 지금 자기는 김일성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여기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국지사 진 짜 김일성 장군은 1930년경 만주에서 별세하였다.

당시 진짜 김일성장군은 김성주가 10대인 시절부터 활약한 바 있고 지금 살아 있으면 80이 넘는 고령자일진데 지금 58세의 새파란 김성주가 진 짜 행세하기에는 역사적 날조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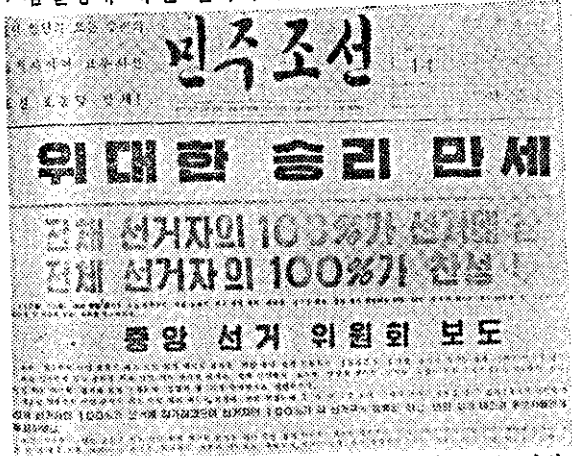
이렇게 중공의 줄개로 따라 다니던 김성주도 일본 관동군의 만주 토벌작 전이 벌어지자 중공군이 모두 중국 연안으로 도망 갔는데도 김일성은 간 신히 소련으로 도망갔으며, 이 때부터 소련에 달라 붙어 그들의 앞잡이 훈련을 받았으며, 8.15해방과 동시에 소련군의 등에 업어 소련군 총위(대 위급)로 평양에 들어와 얼마 앓았다가 소좌(소령) 계급장을 달게 되었다.

이러한 김성주를 해방이 되자 소련군은 김일성 장군으로 치켜 세웠더니 이것은 모두 소련이 미리 짜 놓은 계획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김 일성은 북녘 땅에 들어와서 소좌 계급장의 군복을 벗고 어울리지도 않은 신사복으로 갈아입고 다녔다니 열극치고는 철저했던 모양이다.

소련의 등에 업혀 기만적으로 행세한 김일성은 얼마 앓았다가 북한 괴 퇴정권의 괴수로 앉게 되었으니 이 때부터 김일성과 소련정령군 사령부는 김일성을 앞잡아 보고 비웃는 측들을 하나씩 숙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피의 숙청

김일성에 대한 반대파에 대하여는 누구할 것 없이 피의 보복을 감행하 였다.



큰 사건으로는 해방 후 국내파로서 쟁쟁했 던 현준혁, 주영하, 오기섭 등의 숙청과, 6.25 동란후 그 실패 의 책임을 뒤집어 씌 어 간첩죄로 숙청한 박헌영 일당의 남로당 계, 그리고 소련과, 중공파의 대대적인 숙 청은 피에 굶주린 김 일성의 독약성을 여지

<어처구니 없는 정치 조작극, 100% 참가에 100% 찬성 이라니 이것이야 말로 진실로 공산주의 정체다. >

없이 폭로시켰다.

이들은 한 때 김일성의 오른 팔로써 충성을 맹서했던 소위 고관 대작들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두계 아성을 넘겨다 보는 무리는 옛 친분을 막론하고 피로써 보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반 주민에 대한 숙청 사업은 어떠하였던가.

1956년부터 만 2년간에 걸쳐 소위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이라는 것을 벌려(책임자로 김일성의 친동생인 중앙당 조직부장 김영주) 300만명의 주민을 소위 「반동분자」라는 죄목으로 낙인을 찍어 산수갑산 지방으로, 중노동



<소위 「10호상점」이라는 백화점, 고관들만이 들어 다닐수 있다. 그러나 조라하기만 하다.>

사업소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해안지대 및 휴전선 지역의 주민 또한 내륙으로 강제이주시켰다. 물론 이 사업으로 처형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3) 김일성의 우상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항일투쟁의 영웅도 아니오 부친 「김형직」이나 모친 「강반석」도 혁명가나 애국자도 아니었다. 그러기에 해방후 북녘 동포 누구 하나 환영하거나 영웅, 장군으로 추대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소련 결령군은 억지로 영웅화 시킬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8.15해방과 더불어 소련 결령군에 의하여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김일성의 우상화는 시작되었다. 해방후 소위 「김일성 장군의 노래」에 담긴 터무니 없는 조각으로 부터 김일성은 소련의 꼭두각시 놀음에 따라 소위 민족의 비극일 6.25를 일으켰다. 그러나 북괴는 6.25를 일으켰으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참담한 경험을 겪었을 뿐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런대도 북괴는 이런 민족적 양심도 없어 마치 대한민국이 북침한양 주민들을 기만하고 자기네들의 승리라고 우겨냈다. 이 기만극이 또한 민족 해방 투쟁사에 나타난 날조인 것이다.

나아가 해방되기 전 김일성의 중공군 출격 시절을 과장해서 항일 투쟁사를 엮었는데 이 또한 김일성이 마치 해방의 은인인양 꾸며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해방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에서 얻어진 광복임은 삼척 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괴는 김일성의 영웅적인 사실을 날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증명하고자 북괴는 1966년도 와서 함경북도 일대에 고고학자, 조형미술가들을 파견하여 살아 있는 나무껍질을 벗겨 내고 폐인트로 항일 투쟁의 구호 등을 써 전적지 표시를 했는가 하면, 패달, 기념패 등을 박아 놓았다. 그리고 문예 작가들을 동원하여 김일성의 역사를 날조하고, 그의 조상대까지 애국적인 가정으로 꾸미기에 무던 애를 쓴 것이다.



<김일성 수령 연구실, 뫼이 대단하다고 조작된 역사를 연구해야 하며, 김일성을 하느님 이상으로 모신다고.>

또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일원을 성역화하여 김형직과 강반석의



추념 묘비를 세워 놓고 「인민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찬양하기에 거침이 없다.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도 강제로 순례하고 있다니 민족의 반역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나.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회

<원물세 공출. 그들에게는 원물세라는 공출로 다 걷어 가고 하루 세끼의 배급만 주고있다.>

북괴는 1946년의 소위



「산업국유화」를 비롯하여 6.25동란 후 개인상공업 말살, 농업의 협동화, 수산업의 협동화를 통하여 모든 생산수단과 재산을 괴뢰집단이 몰수하고 노동자, 농민, 어민, 상공인은 모두 임금노동자로 몰락시킨 것이다.

공산주의는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협동농장, 농사도 감시를 받으며 지어야 한다.> 모든 재산은 국유로 하고 주민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모두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한 재산과 생산수단을 괴뢰집단이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경제에 대한 계획과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안되므로 부득이 「계획경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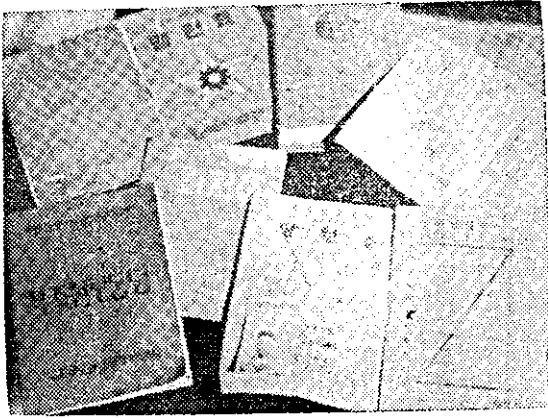
이러한 계획경제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마져들어가지 않을 때는 크게 차질이 생기고 심하면 경제는 파탄이 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북괴이다. 이미 7개년 경제계획은 실패하고 3년간 더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이 여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계획경제는 또한 모든 면에서 제한을 가하므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 양으로 힘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품의 질이 나빠지고 실적도 떨어지는 것이다. 오직 이들은 공산당이 시키는대로 따라 해야 하는 「일군」(그들이 즐겨 쓰는 말)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큰 농지제도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북괴는 처음에 「경자유기전」(耕耨有其田)이라하여 토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였다.

1949년 3월 5일 북괴는 「토지개혁 실시에 관한 법령」과 「동 실시에 대한 임시 조치법」 공포에 의해서 동년 3월 8일부터 3월 20일만에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북괴는 일차적으로 농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각종 토



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종 목적이 「토지의 국유화」 즉 「집단화」에 있었으므로 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6.25 판계로 실현을 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초사업을 진행하다니 못 믿을 것은 주민들이라는 것이다. 각종신분증> 하여 왔는데, 그 주된 것으로는 「토지개혁」, 1946년 6월의 「농업협동조합법」 제정과 「임야관리령」, 1946년 9월의 「토지 관개 관리령」 1949년 12월의 「국영농장」의 규모 확장, 1950년 2월의 「농기계임경도」설치 등의 재조치였다.

북괴는 6.25가 끝나고 1954년에 드디어 「사회주의적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국영농장제도로 뒤바꿈하여 그 조직을 대대적으로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극력 반대하였으며, 협동농장의 가입을 반대하는 농민에게는 수매사업(공출)을 철저히 하여 기아선상에 놓이게 하는 한편, 고립화시키는 정책을 썼으므로 이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괴는 1957년에 전부 협동농장의 일군으로 집어 넣은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일군으로 일하고 괴뢰 당국에서 주는 배급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 조직에 억매인 사회

북괴 치하에서는 개인의 의사란 그것이 「집단」을 위한 건설적인 의사가 되지 못하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 지역에서 개인의 의사를 마음대로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괴수 김일성 뿐이다.

북괴는 소위 교육이념으로 공산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실천요

강으로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와 같이 오직 공산당이 시키는대로, 그리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맹」(農盟), 직장인들은 「직맹」(職盟), 여자는 「여맹」(女盟), 젊은 이는 「사노청」(社會主義勞動者青年總同盟)에, 학생들은 「소년단」(少年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열성자가 될려면 「당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 주민은 2중, 3중으로 조직속에 얽어 놓은 것이다.

또한 북괴는 공산주의 윤리관을 내세워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을 분리시켜 가족끼리도 고발하고,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북녘의 주민들이 소지하는 각종 증명서를 살펴 보자, 우리는 「주민등록증」 하나면 언제, 어디나 자유로히 여행하고, 이사할 수 있는 사회와는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농민——공민증, 노동당증, 공로메달증, 여행증명서, 위생통과증, 양포, 기장증, 농업근로자 동맹증, 군사증, 노력수첩.

△공무원——공민증, 군사증, 사노청명증, 직맹증, 노동당증, 직장신분증, 공로메달증, 공무원여행증명서, 신임장(출장서), 위생통과증(여행시) 기장증, 양포, 휴양증, 여맹증(여자)

라. 자유의 박탈



<북괴에 강제납치, 억류되었다가 송환된 미「프에블로호」장병들 (판문점에서)>

현재 북괴는 약 170만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비례로 본다면 약 8:1의 비율이고 년소자와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약 4:1이라는 엄청난 당원이 4



명에 대하여 1 <헛벗고 굶주리며, 오직 「일군」으로 전락한 북한 주민들.> 명이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수족인 괴뢰 당원은 김일성의 명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소위 헌법에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인권을 규정해 놓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당독재(공산당 뿐)를 실시하는 집단에서 공산당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괴의 헌법이 기만적이라는 것은 소위 공산주의 기본 원리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여 유물론적 근거에 의하여 종교를 인정치 않으면서 헌법속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숙청 과정에 있어서 가장 혹독하게 다루었던 것이 종교인이며, 지금 북괴에서는 종교인 가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박해를 가하고 있으며, 모든 공직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불순 분자의 낙인이 찍혀 있다.

또한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는 철저히 없다. 왜냐하면 우선 「직업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은 공산당에서 적성을 참작 일방적으로 고용명령이 내린다. 따라서 개인은 이 명령에 따라 이사도 해야하며 개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된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야 한다.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는 법질서에 앞서 우선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재판에 있어서는 개인의 권리 존중이 아니고 공산당의 이익

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성도 공산당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은 인민재판을 보와도 법이 무시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 강제노동 —주민은 배급만—

북괴도당들이 「일군」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고 함은 앞서 말한 바이다. 공산당원만이 일군들을 부려 먹으면서 세상을 부럽없이 산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은 배급제도에 있다. 왜냐하면 이 배급제도만이 어린아이 젖줄 처럼 울리고 웃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급제도가 있으므로서 공산당의 독재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먹물만치만 줌으로써 주민은 만부득이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라는 구호가 있다. 이 말은 실업자를 없앨려는 민주주의사회에서와 같이 「근로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곧 배급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다.

북괴에서 배급이 없이는 한 퇴의 곡식도 살 수 없다. 이런 물건을 사고 팔 개인 상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배급제도이기 때문에 남아 돌아 갈 식량이 전혀 없는 것이다.

북괴에서는 식량 배급을 매월에 15일분씩 2회 준다. 물론 배급이라 해서 무상이 아니라, 배급기준은 줄 수 있는 한도량이고 모두 자기 소득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배급의 하루 기준은 보통 노동자와 사무원이 700g이고 그 비율은 대개 백미 : 잡곡비는 4 : 6 내지 5 : 5이다. 계급이 높을 수록 배급량도 많고 백미의 비율도 높은 것은 그들의 계급제도는 배급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음에는 북괴에선 몇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임금은 얼마나 받으며 물가는 어느 정도인가 알아 보자.

북괴는 법령에 의하여 하루에 8시간의 노동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15~16시간의 강제노동을 치루어야 한다. 임금기준이 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초과시간에 대하여 시간의 임금은 주지 않는다. 하루에 8시간 노동만 한다면 구태여 그들이 떠들고 있는 「새벽별 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지 않을 것이다. 또 일을 시키는 주체가 괴뢰당국이기 때문에 어떤 쟁의나 파업도 불가능한 것이다.

과도한 목표의 설정 때문에 이런 초과 노동이 불가피하고 또 목표의 달성이 미급할 때는 그만큼 배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친 제약을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는 임금과 물가를 비교해 보자.

※ 금액: 원

물		가		노동자		과 퇴 당 국 요 직		교		원	
품	목	가	계	등	급	임	급	등	급	임	급
면적	학생복		22	3등급	30	상 (장관급)	230-270	대 학 교 수		60-190	
반모직	선사복	24-300	4	〃	34	부상(차관급)	160-200	고 등 기 술 학 교 원		50-80	
면적	동내의	32-38	5	〃	38	국 장	120-150	기 술 교 원		45-65	
양	말	6-8	6	〃	43	도 인 민 위 원 장	150-190	초 급 중 학 교 원		40-50	
유 통	치 마	48	7	〃	48	군 〃	100-120	인 민 (국 민) 교 원		35-45	
라	디 오	250-300	8	〃	52	군 지 도 원 〃	38-45				

바. 이질적인 사회 —불신의 사회—

북의 지하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는 박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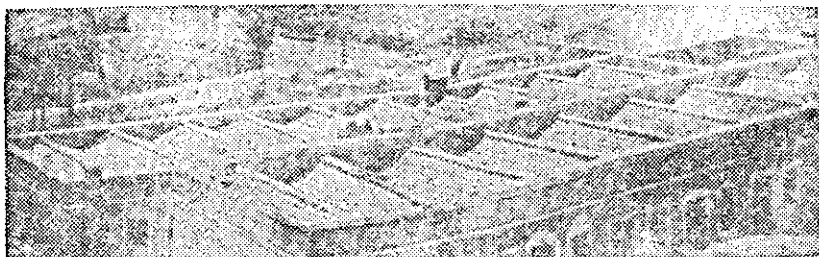
공산당의 철저한 감시는 끝일 새가 없으며, 자유에 있어서도 공산당의 지시와 명령에 따를 자유 밖에 없다.

특히 북의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원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시킴은 물론, 최근에는 이것도 못 믿어 소위 「5호 담당제」(5戶擔當制)라는 것을 두어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5호 담당제는 1958년 말부터 시작된 규제인데 북녘의 전세대를 5호식으로 나누어 열성당원 1명을 배치하여 부부간의 애정문제를 포함한 가정생활 일체를 지도한다는 구실 밑에 간섭하며 감시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5호 담당제」는 1958년 7월 초 「김일성」이 평북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수령 연구실과 같은 것으로 김일성의 우상화에 대한 연구하는 곳)을 찾아가 유급 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도록 해서 이사업(里事業)을 추켜세우며, 이 당위위원회에서 그들을 모여 놓고 과업을 주고 그 집행 정령을 총화하면 일이 잘 된다」고 명령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1967. 19. 13 「노동신문」).

이렇게 하여 강화된 5호 담당제는 담당관 책임하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주민의 사상 동태를 파악하여 점점하



<감시하기 쉬운 아파트, 밖에서 속을 쉽게 감시토록 지어졌다. >

고 상부에 보고하는 한갓 행위의 책임제도인 것이다.

다음에는 북녘이 우리와는 생판 달라진 이질적인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도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에서 이질화된 점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 등이 또한 너무나 달라진 것이다.

(1) 예의 범절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는 복합사회이다. 여러 개인이 구성원이 되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은 국가의 일개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모든 도덕 윤리관은 개인의 생활을 밝고 또 바르게 하여 전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테두리 속에 개인을 두들겨 맞추는 것이다. 그러기에 개인을 매개로한 인간관계는 없고, 오직 공산당을 매개로 하여 인간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불신의 사회를 구성하는 원인이 되고 상대방을 경계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도덕 윤리 밑에 예의 범절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는 예로부터 장유 유서(長幼有序)라는 동양도덕을 잘 지키는 민족이다. 또한 경노정신(敬老精神)에 입각하여 어른을 모실줄 안다.

그러나 북괴 치하에서는 김일성만은 오직 「아버지」 「아바지」 「수령님」 「동지」라고 부르면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어른이고 선생이고 이이들간에도 「동무」로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관념의 파괴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파괴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고 비판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누구도 공산당에 반대될 때는 이런 행패를 부리도록 만든 것이 북한의 사회인 것

이다.

1962년 「한설야」 「심영」 「신불출」 등과 함께 소위 최고 영예인 「인민배우」로 부터 칭소부로 끌려 떨어진 「최승희」는 다름아닌 그의 딸 「안성희」에 의하여 그 죄상이 고발되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안성희」는 자기 어머니가 성격적으로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평양시당 열성자 대회」에서 일일이 털어 놓았다.



<눈치만 보는 감동없는 옴소, 김일성 독재는 주민의 감정을 벗어났다. >

이렇게 복괴는 친척 관념이나 부모 형제에 대한 관념을 파괴시켰다.

그러나 평당원이나 일반주민이 간부당원에 대하여 만든 「동지」라는 말을 쓰지 않을 때는 호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소위 계급정책이라는 것이다.

(2) 탁아소·유치원

북괴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많다. 물론 이런 것은 부녀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될려면 철저한 「집단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처럼 어릴때부터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 더 큰 것이다.

1965년도 현재 북한에는 12,800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1966년 10월 20일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① 탁아소 23,251개소에 약 87만 7천명 ② 유치원 15,218개소에 약 79만명의 어린이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만 4세까지는 탁아소에 맡길 수 있는데, 상기 수자는 북한의 탁아소 연령기 어린이들의 근 70%와 만 5세에서 6세까지의 유치원 연령기 어린이들의 약 60%가 수용되고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조건은 어머니가 직장에 나

가야만 되게 되어 있다. 탁아소나 유치원은 모두 소위 「국영」 또는 협동단체 경영의 경우로 되어 있다.

탁아소의 「보육원」과 유치원의 「교양원」은 피뢰 당국에서 파견되는 요원이다. 이들은 어린 새싹들이 공산주의와 김일성 피수의 붉은 전사로 무장시키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많은 탁아소와 유치원도 결코 공산주의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생활 풍습은 어떤가?

특히 이 생활 풍습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관혼상제를 보자.

복귀는 허례 허식과 물자 낭비를 막는다는 구실 밑에 고유한 풍습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모든 행사에는 30명 이상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겨우 가까운 친척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모인다.

결혼식은 대개 공장 사무실이나 이당 사무실에서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주례는 직장의 간부나 이당 간부들이 행한다. 결혼식에 참석했다라도 식만 볼 정도 바로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날의 목표량을 달성 못할 때는 그만큼 배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피로연이란 없고 신부 집이나 신랑 집에서 국수 정도를 작만하면 여기에 찾아온 손님은 「양권」(배급표)을 주고 간다. 왜냐하면 30명의 식사를 제공하면 30끼니의 식량을 매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배급표를 주지 않으면 품작없이 굶게 되기 때문이다.

결혼의 예복은 없고 대개 평소의 옷차림에 가슴에 붉은 조화를 달면 그만이다 면사포를 쓰는 경우라면 공산당의 특권층 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철없는 어린애들에게 군사훈련이라니, 누구의 가슴에 총을 겨누라고 가르칠 것인가.>

은 주체사는 양인의 백년간약의 축복 보다는 「김일성의 총지한 전사」가 되도록 설교하고 강요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가, 공산당의 지시에 의하여 「관 계획화」에 따라 군자체 연간 계획에 의하여 관을 만들고 그 이상 죽은 자가 생길 때는 관을 배급 받지 못하고 그대로 묻는 것이다.

아무리 공산당의 사회이라도 관혼에 있어서 축복이 없고 상제에 있어서 명복을 빌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써 살맛이 있겠는가, 그러나 북피는 갖은 구실을 다 붙여서 이런 모임을 못 갖게 한다. 모이면 공산당을 비판하고 어떤 모의가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일성 일당들의 심경이다

사. 주민들을 들볶는 각종 운동

▲ 새벽 별 보기 운동

특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으로 새벽 별을 보고 들(또는직장)에 나가고 밤 하늘의 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 온다는 운동이다.

바로 이 운동은 북녘의 주민들이 하루 14-16시간의 고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증이다. 이 운동은 동계를 제외하고는 계속 실시된다.

▲ 냉해 방지 운동

북한은 가을이 들던 바로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리가 내리면 들 곡식이나 벼가 냉해를 입어 크게 피해를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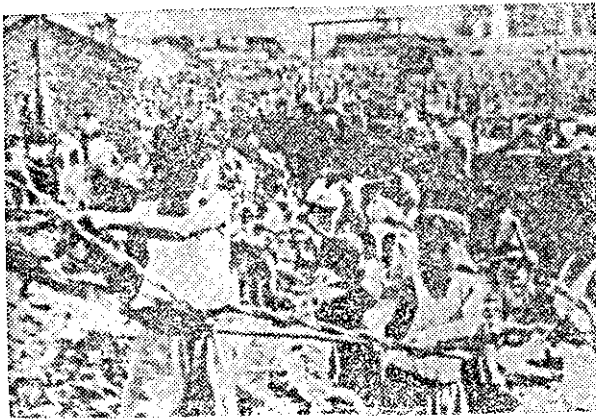
북피 당국은 이런 냉해가 예상되면 모닥불을 피우고 덮지도 못한 이불로 곡식에 내리는 서리를 막아야 한다.

공산당은 자연의 현상을 인위적으로 막는대도 터무니 없는 짓을 저질르기가 보통이다.

▲ 빈손 퇴치 운동

이 운동은 북한은 농촌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운동이다. 농민들은 길을 걸을 때 누구나 빈손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

아침에 나갈때는 농기구를 들고 나가고 저녁에 들어 올 때는 빈손으로 올 수 없어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퇴비용 풀이나 땀감 나무 등 무엇든지 준비했다가 들고 들어 와야 한다



▲ 열두바닥 파 기 운동

북괴는 비료의 부족으로 비료 대신에 환토작업을 벌리고 있다. 지금도 북괴는 분노로서 비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똥·오줌 공출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에서 비료가 <학생들은 의무노동에 중사해야 한다. 「천 삽뜨기운동」> 될 수 있는 외양간 바닥·퇴지우리 바닥·탑장 바닥·부엌 바닥·수채구멍 바닥 등의 흙을 긁어 모아 그것으로서 비료에 충당하자는 것이다.

▲ 천삽뜨기 운동

이 운동은 객토작업시에 벌리는 운동이다. 하루에 한 사람이 천삽을 뜨자는 것이다. 만약 한삽에 1분을 잡으면 꼭 17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30초로 잡으면 8시간 반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 특히 관개 공사와 같은 토목 공사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노력 착취의 표본적인 운동이다.

▲ 허리 안펴기 운동

모내기 때나 추수 때 벌어지는 운동이다.

모내기·추수 등은 허리를 굽히는 작업임으로 만약에 허리를 편다면 이것은 일을 신다는 뜻이다. 도대체 허리를 펴지 않고 하루종일 그리고 며칠씩 펴려야 한다면 인간치고 이렇게 무지한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지 북괴가 아니고는 가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 별 따기 운동

북괴에서 각 직장마다 작업반 별로 명패가 붙어 있다. 그 명패 밑에 작업 성적표를 만들어 놓고, 작업 성적에 따라 성적이 좋은 사람은 「별」을 하

나뉘어 그려 넣어 준다. 별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당에 충성했고, 따라서 사상적인 신임도가 높게 인정된다.

이 운동의 결과 공산당에 맹종의 충성을 강요할 뿐 배급이 더 돌아 간 것은 아니다.

▲ 건설 경기 대회

평양 모란봉에는 북괴 고위 간부들의 전용 요정 「옥류관」이 있다.

그런데 이 옥류관을 짓기 위하여 북괴는 각도에서 모범 일꾼들을 동원하여 서로 성적 올리기 경기대회를 벌였는데, 각도에서는 악대 응원반까지 동원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가관이다. 아무리 공산당식 작업이지만 사람을 혹사시키는 데 별의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 생산 체육 경기

생산 체육경기란 노동 경쟁운동의 일종이다. 주로 운수 노동자들이 하는 운동인데 하역 물자가 축적했을 때 이 하역 작업을 빨리 해치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하역작업은 기준 시간에 어느 편이 먼저 성취 올리느냐에 등수가 매겨진다. 사실 이렇다고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오 그저 쓰디쓴 찬양 같



<주민은 배급만, 턱을 만지만 주는 배급에 의존하는 오늘의 실정>

은 넉두리 뿐이다.

▲ 새 기준 새 기록 창조 운동

1967년 3월 고원탄광 노동자들에 의하여 시작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탄광 작업에서 새로운 기준과 성과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새 기준, 새 기록의 창조를 떠든다고 해도 노동조건이나 노동시설이 경신된 것이 아니고 보면 강제노동은 이제 극에 달한 모양이다.

▲ 국 안먹기 운동

이 운동은 평양 방직공장내서 만들어 낸 운동이다. 과중 노동에 지친 여자 직공들이 남들택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변소 출입으로 구실을 삼는다.

이러한 실정을 안 공산당 간부들은 우선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변소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변소에 못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구분 즉 국을 못먹게 하자는 악랄한 운동이다.

서기 2000년경의 세계와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을 좌표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때의 우리 조국은,

—국토 통일을 이룩한지 이미 오래된 강력한 민족국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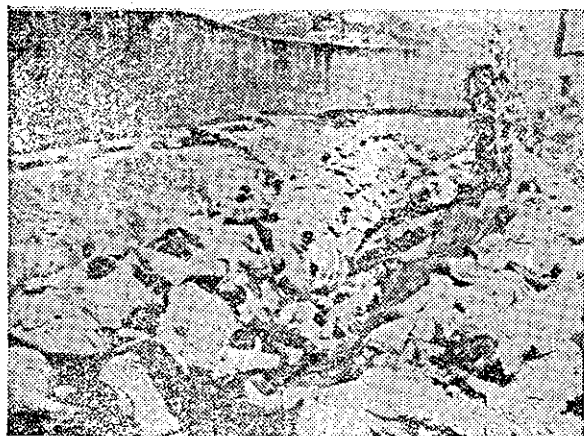
—온 국민이 다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풍요한 복지 국가로서,

—세계사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5주년 광복절, 박정희 대통령 경축사에서—

7. 북괴의 무력 책동을 분쇄하자

가. 해방후부터 6·25까지



북괴 김일성[일당은 그들이 정권을 잡은 후 남한에 대한 끊임 없는 침략의 야욕을 펼쳐 남한의 적화를 위해 무던히 발버둥쳐 왔다.

그들은 남한의 정세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며 그때 그때 수

<공산도백의 만행을 규탄한다.(학살된 양민)>

사르 침략의 수단을 바꾸어 가며 남한을 적화시켜보려 시도해 왔으나, 그때마다 그들의 책동은 분쇄당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들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기도하며, 남한에서 남노당의 지하당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군 철수를 주장, 신탁통치의 지지,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을 일으켜 남한의 사회불안을 꾸준히 조성시켜 가면서 북한에서는 남한 적화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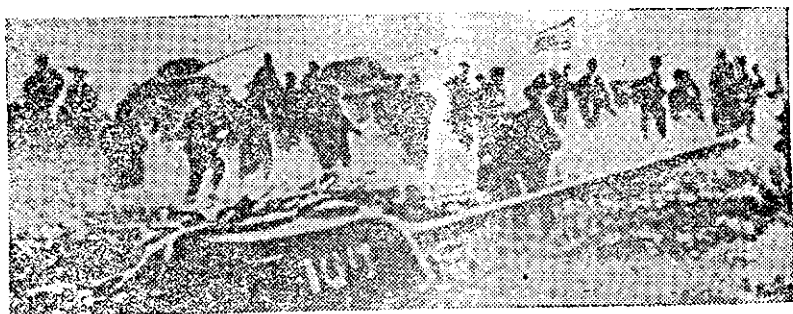
그들은 한 때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공산화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외군철수를 들고나와 전략적인 공산화를 꾀했으며, 남북협상 등 정치적 제스처를 쓰며 저들의 야망을 뒤에 숨기며 협상을 통한 적화 책략을 꾸며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책략 뒤에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꾀하며 남침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이런 무력침공 준비를 은폐하기 위해 평화공세를 불어넣었으며,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曹萬植)선생과 체포된 남로당 괴수 「이주하」(李舟河)를 교환하자고 제의하며 「소위 특사」까지 파견했던 것이다.

전쟁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되었으며, 미국무 장관인 「애치슨」이 미국의 아시아 방위권에서 한국이 제외된 듯 시사하자 (즉 한국이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되자)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시도한 것이 6·25동란이다.

이로 인해 북괴는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참담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빚어냈다.

나. 6·25로부터 4·19까지



<6·25 발발, 드디어 북괴는 불법 무력 남침을 감행했다.>

6.25로부터 53년 7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인명의 피해만 해도, 국군 전사자 23만여명을 포함한 실종, 부상 등 인명 피해는 99만 8천여명을 헤아리고 여기에 「유우엔군」피해자수 15만 2천여명을 더하면 자유진영의 군사적 인명 피해는 무려 115만에 이른다. 여기에 남한 민간인 사망자 학살된 자, 납치된 자, 부상자, 실종자까지 합하면 이 전쟁에서 피해 입은 인명은 200만명에 달한다. 공산측에서도 군사적 피해로 북괴군이 52만, 중공군이 90만명, 북한에서의 민간인 피해로 200만으로 추산되므로 모두 350여만명 따라서 6.25동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550만명에 달하고 있으니 그들의 무모한 만행이 얼마나 큰 참극을 가져왔나를 짐작할 수 있다.

휴전이후 그들은 표면적으로 평화통일을 표방하며 남북교류를 주창하면서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사업과 내부 정치적 숙청을 단행하면서 군사적 재정비를 강화하였다. 그들은 붕괴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재정비를 위해서는 외부적인 충돈을 막아야 했으며,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여유는 갖지 못했다.

김일성은 동란의 패배 책임을 남노당에 돌리어 남노당 간부를 모조리

속칭하는 한편 남로당계 대남 공작기구를 해체하고 김일성 일파만으로 대남 공작을 새로 펴며, 새로운 방법으로 남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간첩들의 밀봉교육이 시작되고 남북인사를 이용, 그 가족과 접선시키며 재일교포를 이용한 우회공작을 펴면서 개별적 고정간첩들을 남파시켰다. 그들은 대통령 선거, 민의원 선거를 기해 평화통일 공세를 취하며 북한지역을 남한 적화를 위한 「공격기지」인 소위 「혁명적 민주기지」를 재건하기에 안간힘을 다했다.

다. 4·19에서 5·16까지

4.19는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자유당 독재에 반대해 일어난 가장 순수한 학생들의 봉기였다. 그러나 북괴는 당장 공산혁명이라도 일어난 듯이 미친 듯이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며, 한국의 순수한 학생들에 대해 기만에 찬 선동을 벌리기에 전력을 다했다. 남한의 일부에서 용공적인 성격을 띤 단체도 한 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산주의 타도」를 뚜렷이 내걸었고 더우기 5.16 혁명으로 반공체제가 뚜렷이 확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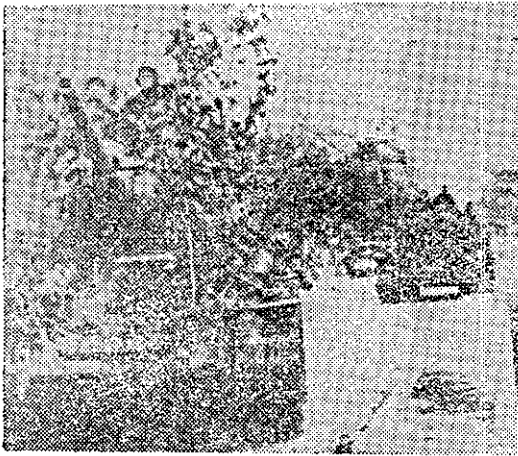
김일성으로서는 남한 적화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그들은 「지하당 조직의 파괴에 따른 지도자의 결여와 조직성, 의식성 미약으로 혁명적 진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만일 남한에 학생들에 조직된 골수분자가 몇 백명만 있어도 4.19이후 혼란된 사회를 적화의 길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라. 5·16이후

61년 9월, (5.16혁명후) 그들은 소위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①소위 남조선 인민들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한다.

②남한에서 노동자·농민·도시·소부르조아지·학생·지식인 등을 포함한 광범한 소위 「반미 구국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이리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 밑에 남한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집결시키고 이 역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적 역량과 단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저들의 통일 전략 밑에 중전의 평화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남한에서의 공산 지하당 조직을 확대하고 지하당을 핵심으로 하



<서울을 초토화 시킨 공산도배들의 살기찬 모습(서울침공)>

금을 지참시켜 남파시켰다. 또 대남공작의 강화에 따라 조총련계와는 별개 조직인 「조선인 지도부」라는 대남공작 전담 기구를 일본에 설치하여 일본을 통한 본격적인 대남공작이 시작되었다.

한편 북괴는 62년 12월 소위 「노동당 제5차 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할 것」을 결의하고,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라는 구호아래 본격적인 전쟁준비에 들어섰다.

전인민의 군대화 정책에 따라 63년에 접어들면서 「노농 적위대」를 대폭 확장 강화시켜 매일 1~2시간씩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최신 자동무기로부터 탱크까지 공급하고 있다.

또 「은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이·동 단위로 간이 대피시설을 만들고 대도시와 주요 산업지대에는 원자 대피소를 축조했다. 각종의 병기공장과 일부 전시 전환 가능한 공장이나, 기업소는 가능한 한 지하로 들어가도록 조치되었고 비행기 격납고까지도 갱도화(坑道化)해 은닉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물 주위에는 물론 해안선이나 산악지방까지 각종 군사시설과 적위대가 배치된 실정이다.

1965년에 들어서면서 북괴의 대남 공작은 또 변화를 가져왔다. 대남 공작은 소극적이었던 데서 적극적으로, 음에서 양으로, 정(靜)에서 동(動)으로 바뀌었다. 기본대상은 농촌에 두고 모택동의 전법에 따른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해 보려 시도했다. 공작면에서도 단기 공작방법을 써 대체로 3인조

는 반미 통일전선의 형성과 권력 탈취 투쟁을 벌리며 남북의 통일전선을 합동시키는 형식을 거친 공산화 통일의 실현 등 새로운 지침이 수립되었다.

이리하여 북괴의 대남 공작은 우선적으로 지하당 조직 확대에 목적을 두고 남한 출신의 간첩을 대량으로, 또한 여태 볼 수 없었던 다액의 공작

의 소수조를 편성 칩투 하여 포섭한 자를 대동 설복시켜 이들을 밀봉교 육시켜 재 남파시키는 방법을 썼다. 지하당 공작 활동과 함께 소수의 무장 간첩들을 남한 곳곳에 칩투시켜 살인과 파괴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도발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피습 납치사건이 빈번했었고 바다에서 어선 납치가 늘어났다.



<피터만이 남은 서울, 김일성은 건널 집 단으로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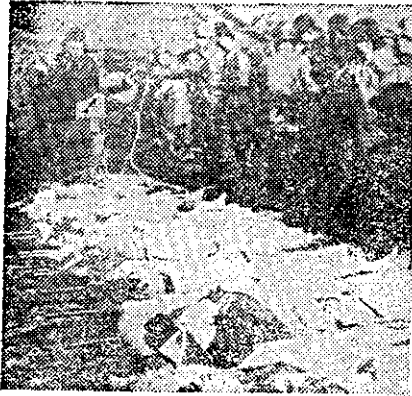
68년에 접어들면서 북괴는 「전군의 간부화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였다. 이는 일반 장병들에게 작전면이나 지휘면에서, 사기면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길러 주어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68년말까지 만도 전군의 30%가 초급 지휘관의 능력을 갖추었고 69년도에는 그 수가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무장간첩의 남파에 있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악랄해졌다.

다. 최근 만행 사례

67년 9월, 경의선과 경원선에서 TNT로 철도를 폭파시켜 열차를 전복 탈선시켰는가 하면 6월 한달동안에 삼척·봉화·영월·경도·명주·울진·부천 등 여러곳에서 3~8명씩 조를 이룬 무장간첩들이 살인 파괴등으로 후방교란을 시도했다. 이러한 저의는 남한에서의 민심교란과 경제 발전의 저해, 외국차관 도입의 견제 등을 위한 것이다.

이렇듯 67년 후반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북괴 무장공비의 만행은 68년 1월 21일 30여명의 무장공비를 서울에 칩투시키므로써 본격적인 유격전을 시도하였다. 특히 같은해 11월에 울진 삼척지구에 120명이란 대량적인 공비를 칩투시켜 유격전 근거지를 확보하고 요인암살과 산업시설 파괴, 후방교란 등을 획책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애국적인 주민들과 군·경



<1·21사태시 무장공비들의 시체>



<삼척 울진의 공비만행(양민학살)>

예비군의 활약으로 파탄되자 본성을 들어내어, 노동자 농민을 위해 공산혁명을 한다는 자들이 산간에서 빈한하게 살고있는 화전민가를 타격하고, 노인과 부녀자, 어린애들까지도 칼로 마구찔러 살해한 만행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이 온 국민들의 반공의식과 공산당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북괴는 69년부터는 대량의 무장공비 남파를 중단하고 소수조의 무장공비를 여러 곳으로 침투시켜 다양한 형태로서 민심교란과 정국의 혼란을 꾀하고 있다. 예를들어 69년 후반부터 북괴의 도발을 들어본다.

9월 17일, 무장 간첩선이 완도 근해에서 우리 경비정을 급습 격침시켜 경관 2명과 민간인 5명을 피살시켰고, 20일에는 군산 근해에 있는 오식도에 간첩선을 침투시키려다 우리에게 나포 당한 바 있고, 24일에는 흑산도에 간첩선을 침투시키려다 격침 섬멸된 일이 있다. 특히 12월에 있었던 「KAL」비행기 납북, 고정간첩에 의한 다목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북괴는 민심을 교란시키는 한편 승객들에게 세뇌교육을 강요했으며, 승무원과 승객일부를 억류해 놓고 그들의 침략행위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더욱 악랄한 것은, 같은 동족에게 세균전까지도 획책하여 일본에서 세균까지 밀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금년에 들어서도 육상과 해상에 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6월 5일에 들어서는 우리의 해군 방송선을 납북해 갔고, 22일에는 현충문에 고성능 폭탄을 장치하여 정부 고위 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북괴의 도발은 남한 내에서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8년 1월에 공해상을 운항하는「푸에블로호」를 납북했고, 69년 4월에 EC121 미정찰비행기를 격추시켜 무력침략에 대한 자신의 속셈을 공공연히 들어내 놓고 있다.

이러한 무력도발과 병행하여 남한에 대한 지하당 조직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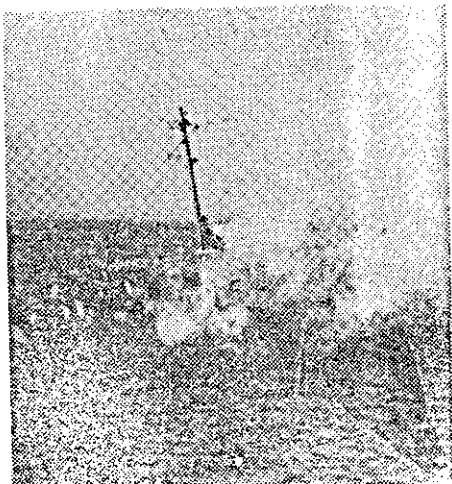
북괴는 우리 해외 유학생을 포섭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침투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동베르린 사건」과 「통일혁명당 사건」 「김규남 간첩사건」등을 들수 있다. 동베르린 사건은 유럽에 유학 또는 체류 중인 인사들을 포섭했던 것이고, 통일혁명당 사건은 휴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하당 조직 사건이며, 김규남간첩사건은「유털」·일본을 통한 정부 고위층 침투사건의 대표적인 것들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다.

북괴는 무력행위로, 지하당 조직으로 남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계속하고 확대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북괴는 대내적인 전쟁준비를 갖추기 위해 강력한 단일 동원체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제를 갖기 위해 내부적인 숙청을 단행했고, 67년 12월에 조직된 제4차 김일성 내각에 4명의 현역군인이 상(장관)으로 등장했고, 69년 개최된 군당대회(軍黨大會)에서 김일성은 전쟁에는 현대 장비가 필요하지만 한국적인 지형과 공산주의 이데오르기에 입각하여 전쟁



<북산에서 노획한 공비 휴대품>



<56함을 피격했다(어뢰작업 보호중)>



<KAL기를 남북한 북괴는 승객 일부만 돌려 보
었다. (감격의 재회 순간)>

승리의 기본은 인간의
사상임을 강조하였으며
지금 현재 김일성의 극
단적인 이상화와 소위 김
일성 사상을 확립하고 있
어, 이미 김일성은 강력
한 지도력을 재 확립했다.
북괴는 또한 예산 규모를
해마다 확대시키며, 군사
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또 이런 막대

한 국방예산을 공표하여 전쟁상태의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다. 북괴는 또
북한의 전 국민에 대한 전쟁준비와 총동원을 위해 조직적인 태세를 강화
하고 있다. 그들은 1.21 무장공비의 서울 침입과 푸에블로호를 납치하고,
EC 121 미정찰비행기 격추하여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시킨 후 이를 대
내적으로 전환, 동원태세의 확립과 국민의 관심술 외부로 전환시키는 배
유효하게 이용하고 있다. 북괴는 또 한·일관계의 개선과 파월 한국군
의 우수한 전투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되자 크나 큰 위구심을 가지고 그
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소위 「4대 군사노선」을 더욱 확대강화
하여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괴는 대외적인 전쟁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남한 내에서
공산활동을 강화시키고 소위 「통일 전선」구축에 힘을 기울이며, 북괴의 국제
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국제 정세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통일 전선」이란 특정한 정치상황에서 상대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투쟁
하기 위해서는 각 당파가 내세우는 강령중 단 하나라도 자기와 일치하는
점이 있으면 이들과 제휴하여 상대편 정권을 타도하고, 그후 하나씩 하나
씩 연합했던 당파를 섬멸해 간다는 것이고, 국제정세가 북괴에 유리하다는
것은 70년대에 중공이 핵무기를 완비하면 아시아에서의 공산권의 꺾힘이
강화되며, 71년 영국군이 「스에즈」 운하 이동으로 철수하므로 소련의 진출
이 강화될 것이며, 72년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일본환관, 그리고 아시아의
비미국화 정책등을 들어 말하는 것이다.

북괴는 또한 해방후 26년간이나 누적되어 온 북한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일하는 대통령

해소하는 돌파구로서의 방법으로도 남한에 대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북괴는 남한에서의 소위 「객관적 정세」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연비어와 평화공세를 벌리며 국민들의 탄정부 감정을 유발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괴의 이러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국민은 일치 단결하여 범국가적인 대간첩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향토예비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무장공비들의 도발을 분쇄하며 도서지방과 해안선 방어를 철저히 하여 간첩들의 침투를 방지해야 한다.

조국 근대화의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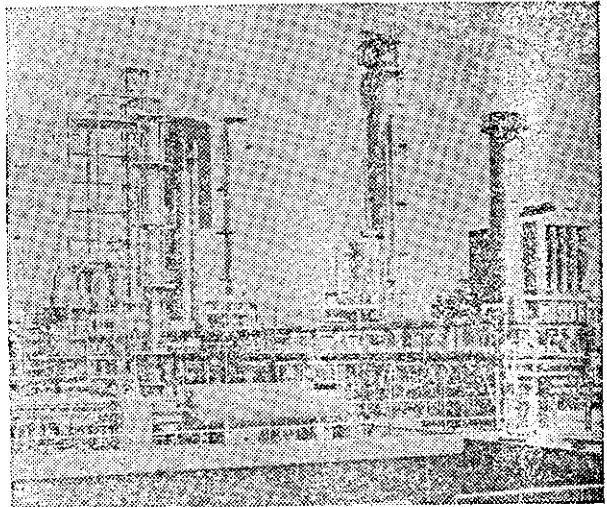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치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자

— 박정희 대통령 67년도 연두교서에서 —

8. 70년대와 통일 기반 조성

가. 국토통일과 70년대의 중요성

정부는 1962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 「자립」 「번영」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아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종합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 빈곤에 도전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 보겠다는 최초의 역사적 결단이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다 준 위대한 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1966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 후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의 눈부신 발전과 아울러 자주국방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밑거름으로 조국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1970년대의 중요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단반의 준비를 다한 것이다. 그 동안 국력의 신장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결과 이제 우리는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모되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해외의 군사원조(월남파병), 기술원조(용역수출) 경제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면에 있어서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발전을 두려워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북한 괴뢰의 침투와 파괴공작은 날로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면국방, 일면건설」이라는 목표 밑에 국방력의 강화를 위하여 온갖 힘을 다해야 하겠다.

소위 1970년대초 북괴 괴수 김일성의 무력 적화통일론에 대비,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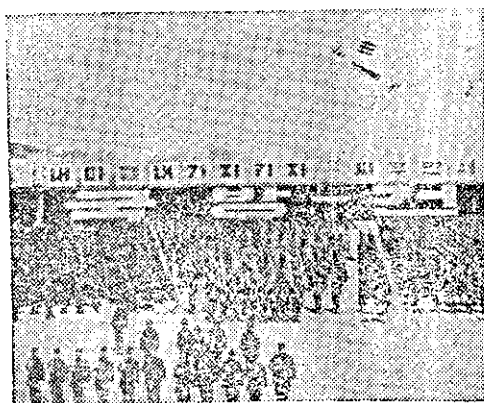
실로 1970년대의 우리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경제 개발계획을 눈앞에 두고 경제건설에 매진하여야 하겠다.

이제 우리는 1970년대를 고비로 자립과 번영의 기틀을 조성하여 국제적으로는 번영하는 새로운 한국의 「참 모습」을 세계 만방에 뚜렷이 부각시켜야 하겠고 국내적으로는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여 잘 살 수 있는 조국으로 만드는 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면 이것이 곧 우리의 소원인 국토통일애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통일문제는 70년대 후반기로 미루고 지금은 국력신장을 위하여 매진할 때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자립경제 확립이라든지 또는 조국근대화라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과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과업이며 준비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97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 국민이 합심하여 조국근대화라는 대작업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다하여야 하겠다. 그 때가 되면 모든 국제적인 객관적 정세도 많이 변동되고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도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리라 보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감안, 우리는 70년대의 중대한 시기를 맞이 하여 우리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민



<내 고장 내 적장을 지키는 향토예비군>

축적 숙원인 조국근대화와 국토통일을 이룩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나. 통일 과업 달성을 위한 선행 조건 조성

(1) 자조정신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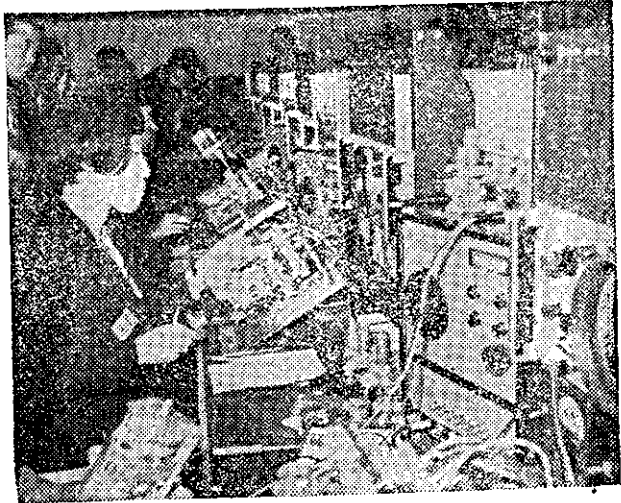
1970년도 대통령 연두교서를 보면 「이제 우리는 지난날 실의에 찻던 우리 겨레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안겨다 주고 의타(依他)와 빈곤의 역사 위에 자립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1960년대를 청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화의 국민적 열원을 성취하여 기필코 이 땅에 풍요하고 보람된 조국을 건설하고야 말 1970년대를 눈앞에 바라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과 같이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동안 정부와 합심하여 국가 발전에 온갖 경주를 다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197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룩한 조국근대화와 자립경제 확립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여 국토통일의 국민적 열원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한 때이다. 우리는 단결과 협조하는 마음 가짐속에 우리의 민족중흥의 대과업도, 국토통일의 민족적 열원도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것이기 때문에 197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중삼과 모략 대신에 이해와 관용을 그리고 부정과 아집(我執)대신에 긍정과 양보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조정신 함양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다.

(2) 자립경제 확립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우선 경제 건설에 중점을 두고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회 복지에도 중점을 두게 된다. 다음, 경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소비가 미덕이 될 정도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최고도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제 1차 및 2차 5개년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에 성공하고 자립경제로의 전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나 기타 사회 복지사업은 앞으로 제 3차 5개년계획에 보다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제1차 및 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모되었으며 국민생산에 있어서도 1961년에 21억 5,300만불에 불과하던 것이 1969년에는 203억불에 달하고있다. 또한 1인당 GNP(국민총생산)를 보면 1961년에 84.8불이던 것이 1969년에는 195불로 약 2.3배가



<우리 모두 조국근대화의 역군이 되자 (전자공업)>

증가되었다. 한편 경제 성장률은 1962년도에 이루었던 3.5%로 부터 1966년의 13.4%에 이르러 당초 계획기간중에 년평균 7.1%를 달성하려던 것을 8.5%로 초과달성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거두었다. 이러한 실적은 1951년부터 1961년까지 평균 4.8%의 성장밖에 이루지 못했던 사실과 비교해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성장이었다. 그후 1967년에는 8.9%, 1968년에는 13.1%, 1969년에는 15.9%라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산업별 성장의 추세에 따라 국민총생산 가운데 각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1960년도의 당시만 하여도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36.9%이고 광공업이 15.7%, 사회 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서비스, 운수등)이 47.4% 이었다. 그러나 1966년에 와서는 2차산업인 공·광업의 비중이 뚜렷하게 커져서 19.6%로 늘어났고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이 36.1%, 사회간접자본의 3차산업의 비중이 44.3%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2차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공업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기 전체인 1961년에는 4,200만불에 불과하던 것이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와 온 국민이 애써 노력한 결과 년평균 44%씩 증가하여 제 1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인 1966년에는 6배가 넘는 2억 5,000만불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출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수출 상품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 1961년만 하더라도 총 수출품의

주요 경제지표

부 문	단 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국민총생산	천만불	215.3	218.5	241.9	266.6	287.3	332.4	367.8	502	607.3
1인당 국민총생산	불	84.8	83.6	89.8	96.4	101.2	114.3	123.5	164.7	195
경제성장률	%	4.2	3.5	9.1	8.3	7.4	13.4	8.9	13.1	15.9

대부분이 가공되지 않은 농 수산물 및 광산물이었고, 공업제품은 불과 22%인 950만불이었던 것이 1966년에는 그 비율이 반대로 되어 공업제품이 63%인 1억 6,100만불에 달하여 5년간에 공업제품 수출액은 무려 17배로 증가되었다. 또한 수출 대상국도 1961년에 27개국에 불과하던 것이 1966년에는 70개국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은 오늘 날까지 계속 증가하여 1968년에는 5억불, 1969년에는 7억불을 달성하고 1970년에는 1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석탄 전력등의 「에너지」원의 확보, 철도, 도로, 항만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시멘트, 비료, 제철 등 기간산업의 건설, 농업생산의 증대, 국제수지의 개선등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주요 산업생산량

구 분	단 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석 탄	만 톤	558	743	886	970	1,025	1,161	1,244	1,024	1,027
비 료	〃	6.4	8.1	9.7	14.1	16.3	19.0	41.7	104	120
시 멘 트	〃	52	79	78	124	161	172	244	357	486.5
전 력	만Kw (발전량)	20.2	22.5	25.2	30.6	37.0	44.3	56.0	68.6	87.9
수 출	천만불	4.2	5.6	8.4	12.1	18.1	25.5	35.8	50.0	70.2
총 산	천 톤	3,463	3,015	3,785	3,954	3,501	3,919	3,603	-	4,090

이와 같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첫째, 온 국민과 정부가 일치 단결하여 인내하고 노력하였다는 것과,

둘째, 정부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곤란한 기간 산업이나 기타 중요 부문에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였고 전적으로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주었고,

세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던 전력, 석탄, 연료등 에로 부문에 대한 우선적 투자로 이를 타개함으로써 다른 산업의 발전을 밀바침해 주었고,

네째, 농업부문에 있어 어려운 자연 조건을 극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고,

다섯째,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를 거두었으며,

여섯째, 5개년계획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손을 댄 현실화 개방정책 (금이현실화, 무역자유화, 변동환률제 등)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수출 증진은 물론 의화 획득으로 자립경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영원인 국토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자주 국방 태세 확립

우리는 지금 조국근대화의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면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북괴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질시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민심교란, 정치 혼란 경제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각종만행 「1·21사태」, 「울진·삼척 지구의 무장공비 남파 사건」, 그리고 「KAL기 납북사건」,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휴전선 일대의 침투사건등 계속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혼란과 불안을 증대시켜 우리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방이 흔들릴 때는 모든 것이 허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아래 국방력의 강화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의 대비, 즉 주한 미군의 철수에 관련된 우리의 국방에 대한 재검토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국방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세밀하게 검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국군의 월남 파병을 계기로 논의된 군장비의 현대화 계획은 미국 정부의 우호적 협조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많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현대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노력은 더욱 하여야 하겠고, 군의 교육 훈련면에 있어서도 현역 군인은 물론 향토예비군의 교육 강화 및 장비의 현대

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하겠으며, 국민은 「싸우면서 건설하자」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아래 자주국방태세 확립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1962년 우리 역사상 최초로 자주, 자립, 번영이라는 원대한 목표아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종합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 빈곤에 도전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우리의 경제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 다시 1967년 부터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여 왔고, 이 계획 역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자립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제 대망의 1970년대를 맞이 하여 우리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근대화와 국토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국민의 자조정신 함양, ②자립경제의 확립, ③자주국방태세의 확립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력의 신장은 상기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비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1970년대 후반에는 이와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小利)를 생각하기 전에 대아(大我)를 돌아보고, 개인의 안일과 행복을 구가하기 전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근심하는 참다운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싸우면서 건설하자」, 「우리고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확고한 정신으로 뛰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모처럼 이룩한 자립경제와 조국근대화의 기반을 더욱 굳혀 국토 통일을 이루고 이 땅 위에 번영과 복지사회를 건설하여 우리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하겠다.

9. 8·15선언과 평화통일 접근의 새 구상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보는 획기적인 평화통일 접근 구상을 천명하였다. 이 「8·15선언」은 국민 각계의 열원을 집약했고 대변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 냉전 해소를 바라는 국제 여론의 추세를 감안하였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폭 넓은 환영을 받았다.

그것은 또 북괴 김일성 집단에게 중대한 타격으로 되었음이 분명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 집단은 무력도발 정책을 일삼는 다른 한편 파열치하게도 소위 「평화통일 공세」를 건대특히 마냥 벌여 왔던 것인데, 「8·15선언」의 사실 지적에 따라 그 선전적 마자이 폭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남한)의 차원 높은 평화통일 접근 구상의 표명으로 무색하게 되었으며 난처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8·15선언」에 대한 북괴측 반응은 1주일후인 8월 2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색하기 그지없는 역공세로 나타났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남북통일이 해방 4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아직껏 달성되지 못한 원인을 북한 당에 도사리고 있는 6·25전쟁 범죄집단, 즉 김일성 일당의 폭력 적화통일 시도 때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점은 역사와 현실이 증명하는 바와 같다.

하지만 우리의 입각점은 민족적 양심과 통일 주체역량이라는 책임의식에서 설명되는 바이다. 그래서 박대통령은 「국토 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해야 하며,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지어야 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물론 우리가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은 회피한다 해도 북괴가 전쟁 준비에 광분하며 폭력혁명 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힘의 배양」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 경우에 우리의 「힘」은 평화 수호, 침략 격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서 우리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어야만 긴장 완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평화통일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당면한 안보는 거시적인 통일에 직결되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어쨌든 현실이기는 하지만 북괴의 김일성 집단을 상대로 무슨 평화통일

접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비판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 일당을 북한 1천 5백만 동포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공비집단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곳 대다수 동포들은 바깥 소식이 차단된 폐쇄 사회속에서 억압되어 있거나 일시 현혹되어 있을 따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란 객관적 환경조건이 그가 종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알적에는 사고방식을 고치게 되는 법이다. 북괴가 남파한 간첩, 공비들이 대한민국 품안에 귀순하여 새 삶의 길을 찾는 수다한 실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집단은 「공산권내에서 조차 빈족의 대상」인 극좌 모험주의에 매달려 있어 불안을 금치 못한다. 북괴는 개인 미신을 반대하는 소련의 반「스탈린」주의를 소위 현대 수정주의라고 질질을 하며, 또 등「유턴」을 휩쓰는 자유화 물결이 북한에 밀어 닥칠까 두려워하는 데서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유학생도 내보내지 않는 무리이다. 물론 세계의 대세와 진보적 조류를 거역하는 집단은 절대로 장구하게 지탱할 수 없는 법이다.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러 저러한 도덕적 「방안」보다도 통일을 실무적으로 다루고 받아 들이게 할 「조건」의 형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박 대통령의 지론인 「70년대 후반기 통일노력 본격화」론은 본사 우리의 「주체 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 그리고 「북한의 폐쇄적 사회체제의 변질 가능성」등 거시적이고 착실한 통일 조건 형성을 다짐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남북 통일은 「민족의 지상 명령」이므로 여하한 난관과 애로가 있더라도 부단한 접근 노력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 마침내 8·15 광복 반세기에 즈음해 전진적이고, 획기적인 구상 발표를 보게 될 셈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그러한 적극적 통일 구상은 그 동안의 조국 근대화 작업이 국력 배양에서 뚜렷한 자신을 일깨우게 했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8·15 선언」에 밝혀진 통일 구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박 대통령은 먼저 긴장 완화가 평화적 통일 접근의 「선행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세계의 눈과 귀앞에 북괴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천명하였다.

첫째 것은 다음과 같다.

북괴는 무장 공비 남파등의 모든 전쟁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요컨대 북괴에 대해 무력사용 및 폭력혁명론 포기를 촉구한 것이다. 그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국이 단계적으로 남북간의 「장벽 제거」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사실 긴장 완화가 선행되지 않는한 남북교류의 운위는 한낱 선전이거나 기분론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우선 긴장 완화, 이어서 단계적인 장벽 제거, 끝으로 「유엔」감사하의 남북 총선을 내다보는 통일 접근 방법은 정당하고도 현실적이다.

둘째로 「북괴가 한국의 민주, 통일, 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하였다.

—「유엔」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평화기구이며 그 회원국에는 동·서양대 진영과 중립국들의 대다수가 망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괴는 입으로는 「유엔」의 헌장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유엔」은 한국 문제를 토의할 권위와 권능만큼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북괴는 「유엔」이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한국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들의 무력 적화통일을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한국문제 취급에서 그 권위와 권능의 인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동시 초청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괴의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만이 초청을 받아왔다. 한편 공산측은 소련을 대변자로 내세워 소위 「유엔」군 철수안이니 「언커크」(「유우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해체안을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1970년으로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8·15선언」이 제시된 것은 시기 적절한 포석이라고 할 것이다.

실령 북괴가 앞으로 「유엔」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같이 참석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북괴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

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1954년 4월의 「계네바」 정치회담 때에도 북괴가 소련·중공을 따라 그 회담에 참석하여 우리 대표와 실전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참석은 그들의 의견도 들어본다는 격이지 절대로 합법적 승인을 의미한 바는 없다. 우리는 북괴 김일성 집단이 전범의 무리임을 알고 있으나 동시에 그들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염두에 들 수 있겠다.

끝으로 8·15 선언은 북괴에 대해 차원이 높은 평화적 경쟁을 호소하였다.

「나의 구상에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적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고 제의한 것이다.

—이 대목은 국민을 잘 살수있게 하는 경쟁의 호소로서 공명正大한 민족적 양심의 표명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한 체제의 경쟁, 「선언의 경쟁」이야말로 통일 이전에 우리가 이룩할 노력의 방향이며, 북괴가 고집해 온 유일적인 무력 투쟁을 대신할 유일하고도 정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괴 김일성 집단은 1주일 난처해 하며 망서릴 끝에 8월 22일자 「노동신문」(북괴 노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사설을 통해 8·15 선언을 전면 거부했다. 북괴는 파열치하게도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마치 우리가 북진 도발이라도 해서 야기된 것 처럼 묘사하려고 했다. 또 소위 「남조선 혁명」이라는 그들의 폭력 혁명 시도는 마치 남한 주민들이 하는 것인 양 거짓 선전했고 북괴 자신은 간첩이나 공비를 남파한 일이 없는 듯이 늘어 놓았다. 「유엔」에 관해서는 진부한 퇴짜를 맞을 반복했으며, 끝으로 한국 정부의 폭력적 진북 없이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노골적으로 호전적 언사를 떠들어대었던 것이다.

북괴는 김일성 중심의 개인 미신을 역사 위조를 통해 집착하고 있으며 폭력 혁명을 교조로 삼고 있으니, 그 내부 변화 또는 자유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8·15 선언」을 받아 들이지 못하리라고 내다 보게 된다.

그러기에 현단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8월 31일자로 야당 의원들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적했듯이 「통일에 주도권을 잡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북괴를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의 배양」

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북한 땅에 자유의 바람을 우회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스며들게 하며, 앞으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에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게 될 날을 내다 보아야 할 것이다.

본시 ① 민족의 자체 준비라는 주체적 조건 ② 국제적 여건의 유리한 조성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형성을 갖추어야만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그 노력을 결여한 「기본적 발언」이나 「이상적 공론」만으로 겨레의 숙원이 남북 통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점에서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온 국민은 견해를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8·15 선언」이 발표된데 이어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는 「한국 통일 문제」를 다루는 국제 학술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미국, 일본, 자유중국, 월남, 서부독일등 자유 우방 뿐만아니라 인도와 같은 중립국의 학자들도 참가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토론이 전개되었다.

시기 적절하게 열린 그 국제 학술회의는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8·15 선언」을 환영하였고 북괴의 무력 도발정책을 빈축했으며, 한결같이 평화 통일 접근을 말하는 데 일치하였다. 그리고 통일의 「이니셔티브」 즉 선자적 주도적 노력은 어느 강대국도 아닌 한국인 자신이 취해야만 한다는 점을 아로 새기게 하였다. 다만 한국에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들이 통일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조건과 시기가 역시 중요하다는 제약성을 도의시킬 수 없었다.

오늘 날 북괴 김일성 집단은 「공산권내의 철부지」라고 지목되거나 구들도 김일성이 퇴장하던지 내부변화등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한국의 자위 역량과 국제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결국은 박 대통령이 호소한 바 「선의의 경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경쟁을 어떻게 벌여 나가며 또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선 긴장 완화, 다음으로 남북간의 장벽 제거만 단계적으로 잘 진척되면 국토 양단에 따른 고통은 펴 덜어질 것이고, 종국적 통일의 희망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시대의 조류는 지금 그 방향을 가리켜 주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애호하는 슬기있는 민족이며, 패전국도 아닌 해방국인데 국토양단이라는 뼈저린 고통을 4만세기 동안 겪어왔다. 통일에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도의적 정신과 애국심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 통일 노력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길게 앞을 내다보는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으로 착실한 통일 실력 배양, 현실적인 조건 형성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24일부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한국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대회 축사를 하고 있는 김영선 국토통일원 장관. >

통일을 향한 전진의 대 열에는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있을 뿐이다.

—제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10. 한국통일과 우리의 과제

—영남대학교 주최 통일문제 심포지움(1970. 11. 5)초청 연설에서—

국토통일원 장관 김 영 선

북괴의 침략적 통일 전략

대한민국의 수립에 이어 소련은 그들의 비 협조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을 이어받은 김일성을 수괴로 한 공산괴뢰정권을 수립 하였습니다.

북괴가 그들이 남침을 할 경우 자유세계가 한국을 도우려 오지 않으리 라는 계산하에 불시의 남침을 감행하였던 사실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북괴는 전 한반도의 공산 적화를 위하여서는 120만에 달하는 동족의 유혈도 염두에 없을 정도로 비 한국적이었습니다.

폭력과 무력 그리고 파괴 활동 등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그들의 결의는 이미 행동화되었었던 것입니다.

북괴는 1965년에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준비를 적극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한국의 통일 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한혁명세력의 강화 그리고 국제공산주의 세 력의 단결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에 의한 대한 민국의 전복만이 공산 적화 통일 방안의 강력한 선행조건이 되었습니다.

1966년 10월의 북괴의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보고에서 「오늘날 정세는 남한의 혁명 력량을 급속히 발전시켜 민족해방, 민주혁명을 극력 추진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첫째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위한 준비와 둘째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주변에 노동자 농민을 집결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전력을 다하여 투쟁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단호히 싸울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1967년 12월 16일에 개최된 북괴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된 10개 항목의 정강에서는 앞서 말한 기본적 방침을 재확인함과 아울러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들 세대에 남한의 혁명을 성취하여 조국을 통일하지 않으면 안된다」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북괴의 제성명을 입증할 수 있는 북괴의 전쟁준비상황을 보면 먼저 정치면에서는,

- ① 군사위원회의 기능회복과

- ② 사회안전성 및 국가점열성 등의 기구를 신설하여 북한 주민의 염전 사상(厭戰思想)을 억제하기 위한 이중적 강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② 한편 김일성 정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들을 숙청하고, 호전적인 파격 분자들로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강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 권력 구조변이 전쟁과 혁명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면에서는,

- ① 한국의 공산화를 위한 경제력을 구축한다는 기본 명제하에 전략 산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하여 전략 군수공장을 확충하였을 뿐 아니라,
- ② 중앙의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며, 전지를 대비하여 공장을 지하화 하였고,
- ③ 100명 이상의 중업원을 가진 공장과 기업체에는 각종 포와 탱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상적인 면에서는,

- ① 북괴는 북한의 모든 주민으로 하여금 소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한편,
- ② 김일성의 절대적인 권위와 맹종 사상을 고취시켜 김일성과 당의 명령 지시하에 전 주민이 결사대가 되도록 서약케 하고 있으며,
- ③ 북한의 매스·미디어 80%이상은 김일성 우상화 선전을 위하여 그자 맹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 군사적인 면을 살펴보면,

- ① 북괴는 전지역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군의 간부화, 군비의 현대화라는 노동당의 4대 군사토선에 의한 전쟁 준비를 계속 강행.
- ② 군부의 일대 숙청과 함께,
- ③ 군 편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적화 통일 혁명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좌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④ 군 병력을 증원하고,
- ⑤ 군수 산업을 확장하였을뿐 아니라,
- ⑥ 군수 물자와 함께 비상미를 비롯한 전략 물자 비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괴의 군사비 지출면을 볼때,

- ① 1969년도의 북괴의 국민총생산이 29억불로서 61억불인 한국보다 뒤 지는데도, 군사비는 7억 4천 6백만불로서 한국의 군원을 포함한 4억 2천8백만불과 견주면 거의 배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 ① 또 1인당 군사비를 볼때 한국은 1인당 9.3불을 부담하는데 비하여 북괴는 57.4불로 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외교적인 면에서는,

- ① 중·소와의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 ② 양국으로 부터 군사원조를 받으면서,
- ③ 통일 문제에 관한 평화공세를 펴는 한편,
- ④ 「유우엔」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기반을 분쇄하고자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한국의 공산 적화통일을 위하여 폭력과 무력의 사용을 불사한다는 선언을 하면서도 그들의 위장된 통일 방안을 그때 그때의 정세에 따라 교묘히 조작함으로써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듯이 때 내외적으로 선전하여 왔습니다.

북괴는 대한민국 수립이전에 「남북 협상안」을 제의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 협상안을 1950년의 6.25 대남 무력침략의 은폐책으로써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북괴는 1954년 4월 「제네바」회담에서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 총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의 목적은 우리의 제안인 「유우엔감시하의 총선」을 거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남북인구의 3분의1밖에 안되는 인구로서 남한과 동수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극히 비 현실적임을 깨달은 북괴는 이미 이 제안을 위해서 한국의 행정 구역의 수에 상응하는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북괴는 1960년 8월에 「연방 제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제안은 1960년 4월의 4.19직후의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 공산 혁명의 동조 세력 규합에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이 「연방제」안에서 남북한의 정치 제도는 현상대로 존속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1956년 4월의 북괴 노동당대회의 「남한의 정치 제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체제라야 한다」는 그들의 기본적 정책과는 전혀 모순된 단순한 선언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더우기 근래의 북괴의 노동신문은 1970년 8월 22일 사설에서 「대한민국

을 전복하고 인민 정권이 수립된다면 그때만이 협상에 의해 국토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고 공언하여 결국, 그들의 협상을 통한 통일 문제에 관한 모든 제안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 의도와 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전략 전술의 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제안이 「언커크의 해체」, 「유우엔군의 철수」 공산주의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과 같은 불합당하고 비 현실적인 전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괴는 이러한 제안을 제의하면서도 여전히 각종 무력도발, 휴전협정의 위반행위, 무장간첩의 남파, 대남파괴활동등을 수없이 자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부단히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한에 침투시키기 위한 무장「게릴라」와 특공대의 훈련 양성을 위하여 1961년에는 695부대를 창설, 1962년에는 사회안전성의 조선인 지도부를 설치하여 간첩 500명을 훈련시켰고, 65년에는 283부대를 창설하는가 하면, 1967년에는 124군부대를 창설, 6개기지에서 6,300명의 무장간첩을 양성하는 등 기타 많은 대남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 사이에 검거된 북괴의 간첩수만도 1,782명에 달하고 1953년 7월부터 1970년 9월까지의 북괴의 휴전협정 위반 건수만도 무려 7,89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적 통일 노력

분단된 한국의 통일이 결실히 요청되고 기필코 달성하여야겠다는 때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역사적 측면으로 보아 우리는 4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단일 문화와 공동의 관습과 동일 언어를 지닌 단일 민족이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국토의 임의적인 분단에는 여하한 정당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인도적 측면으로 보아, 우리는 북한 공산 독재의 비인도적 억압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선량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적 측면으로 보아 한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았던 타의에 의한 인위적인 정치적 분단으로 인하여 분산된 가족의 재회는 우리의 권리이며 열망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개인적 자유의 추구권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째, 국가적 측면으로 보아 통일에 의해서만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

고,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들 민족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적 측면으로 보아 한국의 통일만이 북괴의 무력 도발 행위로 인한 극동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쟁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측면은 바로 우리의 전 민족이 국토의 통일과 우리들 자신들의 자결권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행복의 추구권을 갈구하고 있는 많은 이유중의 약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지상 과업인 한국의 통일에 대한 북괴의 방안과 우리의 방안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북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력 적화통일」의 방법이고,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 민주통일」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남한은 1947년 11월 4일에 채택된 「유우엔」의 한국 통일 문제 결의안을 수락하고, 「유우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38선이남에서 실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으며, 동년 제3차 「유우엔」총회의 결의에 의거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정식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된 한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소련 군정 당국이 북한에서의 「유우엔」의 제 결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공산측의 무력 적화 기도는 「유우엔」군의 대한민국 지원 참전에 의하여 북괴의 무력 남침이 적퇴됨으로써 실패로 끝났으며, 북괴의 남침은 12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민족과 많은 「유우엔」군의 인명의 유혈적인 손실을 가져왔던것입니다.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제네바」회담에서 「유우엔」감시하의 평화적인 남북 총선거 안을 제의 하였으나 공산측에 의하여 또 한번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1954년 「제네바」회담이후, 대한민국은 계속 「유우엔」의 통한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북괴는 거듭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의 인정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무력적화 통일의 기본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국토 통일의 제 원칙을 견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첫째는 평화적방법에 의한 통일입니다.

둘째는 전 한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자유 민주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유우엔」감시하의 토착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남북 자유 선거를 통한 통일의 달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진정한 열의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성실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통일에 관한 박 대통령각하의 지난 「8·15선언」도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괴가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고,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무장 공비 남파등의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 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도해 온 중견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무력 도발 책동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부당하고 통일에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며, 또한 국토의 통일이 비록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우리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민족적 과업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진정한 독립 한국의 평화적 민주 통일이란 우리의 목표를 인내로서 달성하여야 하며, 보다 좋은 세계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의한 참다운 한국을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대한민국은 북괴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국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되며,

둘째, 국제적 환경이 한국의 평화적 민주 통일에 유리하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셋째, 북괴는 소위 진 한반도의 적화 전략을 포기하고 평화적 민주 통일의 요청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등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우월한 역량 배양을 위하여서는,

첫째로, 정치적 안정을 들수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은 국력을 배양함에 있어 열쇠나 다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부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반대를 허용할 뿐 아니라 장려하여 줍니다.

자제적 책임을 동반하는 각종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와 같이 법과 질서도 민주주의의 주요 특성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제도는 사회 정의를 보장하며, 또한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산 전체주의 체제보다도 더 효율적인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있는 제도라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입증하여 주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민주주의적 국토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제도가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통제하의 노예경제체제 보다도 생산적인 제도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셋째로, 동맹 당사국의 상당한 국방력의 뒷받침 없이는 여하한 동맹도 그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충분한 국방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가 통일에 우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 물결을 북한에 불어 넣을 수 있는 강력한 터전을 먼저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국방력은 북괴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중구적으로는 북괴의 무력 적화 통일의 제약을 포기치 않을 수 없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공산주의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치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즉 군사, 외교, 경제, 선전등 공산 국가의 모든 자원의 동원이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총력전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것을 자유 진영이 인식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고, 이러한 형태의 전쟁에 대해서는 육군력과 지역 안보나 또는 공군력을 물론 심지어는 핵력까지도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러시아」에 공산 정권이 수립된 직후 「볼세비키」는 최상급의 정치전 개발 훈련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훈련소는 6천개를 초과하고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자 10만명이상이 이들 훈련소에서 양성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군사 전략에다 정치, 경제, 사회, 심리등의 모든 정치적

인 무기와 냉전, 무기 체제를 조정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상 최초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기술은 전혀 새로운, 고도로 발달되고 통합된 작전 과학을 창조해 내게 되었고, 전 세계적 권력 투쟁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취약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자유세계가 정치전을 강화한다면 쉽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공산주의는 약점 투성이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철학 자체가 가면과 기만과 위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만성은 너무나 어마 어마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어둠을 발해, 반복 제시하는 것으로만도 그들의 선전을 무력화 시키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감도 극력 배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자유 세계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로 냉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평화 애호민이기 때문에 잔인 무도한 적과의 생사를 겨누는 투쟁에 말려드는 불쾌한 사실을 전적으로 염오하는데 있으며 다음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전을 과학으로 발전시켜 수 천명의 전문 실천가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냉전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고 초보적인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세계가 공산 침략을 분쇄하려고 하였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이를 분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자유인은 주어진 헌신과 용기, 인내와 이태로서 공산 침략에 대처 이를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1970년 중반기까지는 북괴가 무력 혁명에 의한 적화 통일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국력이 북괴보다 훨씬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현재 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체와 그 취약성을 바로 아는데서 오는 자신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평화적 민주 통일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국토 통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여야 하는 우리의 자신의 과업이며, 또한 우리의 민족적 목표를 위한 강력한 터전의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성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

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범국민적 통일 운동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미래와 과거를 연결시켜 주는 현단계는 민족중흥의 달성은 우리의 자원을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단결과 자원의 동원은 민족중흥의 관건인 것입니다. 민족적 단결만이 우리 목전의 과업인 정치적 안정, 자립 경제 자주 국방, 자신감의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며, 이러한 제 요인은 국토 통일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범국민적 통일 운동을 위하여서는 교육 분야도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대중의 여론에서 존립하며, 그러므로 범국민적 통일 운동은 국민의 지도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하여 이들이 우리의 목전의 과업과 궁극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헌신적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적 환경을 보면.

대한민국은 「유우엔」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고, 한국의 통일 정책은 절대 다수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괴는 남북에 대한 외국 선전을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지지와 또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협력의 정당한 요구를 침식하려고 기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북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제 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업이며 그리하여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괴의 한반도 적화통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북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5 25주년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더이상 무고한 북괴 등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갖인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농민에게 토지를 약속하지만 일단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의례히 농민들을 집단농장에 강제 수용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농토에 대한 애착심을 파괴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위기를 조성하여 온 것입니다. 잘못된 기획과 관료주

의적인 모순과 중공업을 위한 농업의 희생등은 공산 국가에 있어서 농업이 실패하는 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농업을 집산화 함으로써 생산에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데 있습니다. 식료를 수출하던 나라들이 공산 국가가 된후로는 으레히 식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력하고 자랑하는 공업 분야에 있어서도 그들의 업적은 대스러운 것이 못됩니다. 대 약진기에 중공이 이룩하였다는 공업의 성장은 사실과는 달리 선전의 결과이었으며, 이것이 무참한 실패이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느 공산 국가에서든지 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는 조직적 통제와 세뇌만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산 전체주의제가 급속도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자유 세계와의 경쟁에 있어서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동기 유인과 창의력을 허용하고 중앙 통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 체제와 정치적 통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제도하의 대한민국은 국토의 분단으로 초태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혁혁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국민 총생산고는 현재 북괴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괴는 공업의 기반 숙련된 기술자, 풍부한 지하자원등의 이점을 가지고서도 공산 전체주의하의 비참한 실정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상대적 역량을 비교할 때, 남북간의 상대적 역량이 비등할 때에는 그들의 실정을 은폐하고 국민을 전쟁 준비에 동원할 목적으로 각종 도발 행위를 계속하여 긴장 상태를 조작할 수도 있겠지마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북괴보다 월등히 우세해 질 때에는, 그들은 무려 공산 통일이라는 그들의 통일 정적까지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체력량을 강화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 여건을 조성하고, 북괴로 하여금 한반도 적화통일은 달성될 수 없는 목표임을 깨닫게 하고, 자유사회가 공산 전체주의 사회보다 우수함을 깨닫게 하며, 그리고 민주주의가 영속 불멸의 제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 등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완수하여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간위 제26—2—184호 심의 필△

1970년 11월 1일 인쇄

1970년 11월 15일 발행

☆ 민주 통일의 길 ☆

발행 국 토 통 일 원

인쇄 서울인쇄주식회사

△비
매
품
▽

□ 이책은 집안 식구 그리고 이웃
끼리 돌려가면서 읽읍시다. □

